

구분	현재 조건	신자유주의적 접근	공공적 접근
보건의료시장 규제 전략	-서비스 생산에 대하여는 민간에 방임, 단 영리법인 불인정 -건강보험을 매개로 한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가 핵심 -민간영역의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중심의 규제 수단이 한계에 이름.	① 서비스 생산의 시장 방임 ② 공적 자원조달체계의 최소화, 보험시장실패 보완 조치 강구 ③ 소비자 무지로 인한 시장실패 완화를 위한 정보생산 확대	① 공적 소유에 기반한 서비스 생산 ② 공적 자원조달체계의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 ③ 민간영역, 시장영역의 최소화
보건의료시장 관리 주체	- 보건의료시장의 관리 권한의 중앙정부 집중 - 지역사회와 노동에 의한 견제 기전 부재 - 자본의 입장에 따른 의료체계재편을 중앙정부가 주도	-지역에 따라 인구구성, 질병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논리 하에 중앙정부의 책임과 재정부담을 지방정부로 이전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공영역의 후퇴의 위험 -시장에 대한 관리능력이 취약하거나, 관리과정에 대한 노동과 지역사회의 통제기전이 미약할 경우 공공영역 후퇴의 위험 ① 탈 중앙화 (decentralization)	<자치의료>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② 민주적 참여기전을 통한 지역사회참여 보장
재원조달	-사회보험체제로 재원 조달 -국가 20%, 사회보험: 30%, 본인부담: 50%로 구성	-본인부담 50%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 민간보험 중심의 자원조달 체계로의 전환	<무상의료> ①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부담 확대 ②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보험 신설 ③ 조세를 통한 자원조달체로의 전환 - 누적적 부담의 확대로 '사회적 연대', 비용 부담의 형평성 확보
급여수준	-건강보험 급여수준: 50% -급여수준 취약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이 점차 증폭	① 건강보험 급여확소 ②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자원조달기전의 다양화 ③ 선택의 자유와 폭 확대 ④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및 미가입자 확대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한 단계적 무상의료
의료전달체계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실종 -의사-환자관계의 파탄과 인력 및 시설 분포와 행위에 대한 규제 능력을 상실한 현재의 조건에서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기대하기 어려움.	①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구축: 이원화 전략(two-tiered system) ② 민간보험-외로기관 연계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환자 이동 규제 ③ 경제 논리에 따른 선택의 자유와 폭 제한	①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을 통한 환자 흐름통제 - 의료전달체계 확보 ②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환자의 신뢰구축 (주치의 등록제 등)

4.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

- 무상의료 · 공공의료 · 자치의료

우리가 겪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는 보건의료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불만과 급증하는 수요, 의료시장을 통해 높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자본, 사회통제를 전제로 하여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국가권력의 세가지 동력이 맞물려가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이 원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민중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건의료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대중적 불만과 요구가 보건의료체계 변화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단지 자본이 주도하는 흐름에 대한 '저항과 반대'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세계'가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음을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운동으로 전화되거나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다른 세계'가 바로 '무상의료 · 공공의료 · 자치의료'이며, 그것의 기본 이념과 원리는 공공성, 형평성, 민주주의, 사회연대성이다.

1) 무상의료⁸⁾

무상의료는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말

8) 참고로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에서 아래처럼 무상의료시행 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건강취약계층	65세 이상	하위 30%	상위 70%
1단계	전액 무상의료	의료 본인부담 10%	의료 본인부담 30%	의료 본인부담 10%
2단계	전액 무상의료	전액 무상의료	입원 무상의료 의료 본인부담 10%	입원 무상의료 의료 본인부담 10%
3단계	전액 무상의료	전액 무상의료	전액 무상의료	입원 무상의료 의료 본인부담 10%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4조 4천억원으로 추정하였다.

1단계 : 83,930억원, 2단계 : 26,125억원, 3단계 : 34,021억원 이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가져야 한다.

(1) 건강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범위가 민중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급여범위는 의료서비스 그 중에서도 '일부 치료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 민중의 건강한 삶과 노동을 위해서는 건강증진, 예방서비스, 그리고 재활서비스 등이 더욱 중요하지만 현행 의료보장제도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병치료를 필수적인 치료서비스 중에서도 상당수는 의료보장제도의 영역밖에 있다. 반면에 의료보장제도를 가진 서유럽에서는 '생계보장'은 기본이고 '상식'이다. 건강유지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의사처방을 받은 온천욕, 출산 후의 아기 기저귀, 안경을 포함한 각종 보장구, 심지어는 병원에 오는 교통비까지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서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의료보장 혜택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의료보장제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2) 본인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의료보장 제도 급여혜택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혜택 대상 서비스 조차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세금이나 보험료 형태로 사후에 발생할 의료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는 '본인부담금'이 불필요하다. 아울러 '실질적'이라 함은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민중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의 본인부담금을 철폐하든지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단지 환자에게 '의료이용이 완전히 무료는 아니구나'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수가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철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이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인과 병원의 이윤동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자극하는 수가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수가'에 따라 보건의료가 춤을 추면서 덩달아 '민중의 건강'도 불안하게 출렁거린다.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경제적 보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민중의 건강'보다 항상 앞설 수 밖에 없다.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경제적 보상'을 연결시켜주는 제도인

수가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철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수가제도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법으로는 월급제와 인두제가 있다. 병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법으로는 예산제가 있다. 우리나라 병원은 법으로는 비영리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일반기업과 다를 바 없는 상업적 영리기관이다. 모든 병원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환자'는 '인간'이기 이전에 '병원의 수입원'이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병원이 수익성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의 재원은 약 40%는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각출되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각출되고 있는 부분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까지를 합치면 그 비율은 거의 7-80%에 이른다. 이러한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를 '사회적' 부담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① 우선적으로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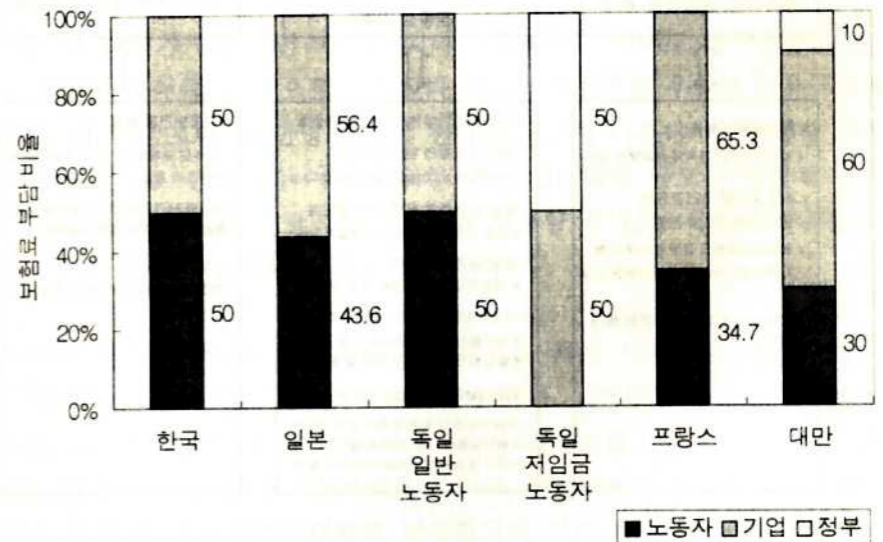


그림 6 노동자가 절반이나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다

- ② 가진자는 더 많이, 가난한 자는 더 적게 내야 한다.
- ③ 무상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득과 동의에 기초한 보험료 인상은 고려되어야 한다.

2) 공공의료

공공의료의 문제는 단지 '양적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낳고 있는 문제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양적인 확대'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현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을 넘어서 수 없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권위주의를 탈피해야 하며, '공급자의·공급자에 의한·공급자를 위한' 서비스에 의해 떨어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전근대적 의료시설과 조직, 인력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자본의 주요공격대상이기도 하며, 자본의 논리대로 보건 의료서비스체계를 바꾸는 데 있어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공공의료부문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민간의료부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공공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6.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1)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의 비중은 기관수로는 2000년 기준으로 9.8%이며, 병상수로는 19.8%이다.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는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스웨덴, 호주, 한국의 전체 고용인력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전체 고용인력의 9.9%가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며, 호주는 그 비율이 7.15%에 이른다. 그리고 스웨덴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호주의 경우도 공공병원이 70% 수준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전체 고용인력 21,099천명 중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336.7천명으로 그 비율이 1.6%에 불과하다.

표 1 전체 고용인력 중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비율

국가	스웨덴(1995)	호주(1997)	한국(2002)
전체 고용인력 중 보건의료종사자 비율	9.9	7.15	1.6

따라서 공공의료 확대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호주만큼은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호주의 7.15%를 우리의 고용규모에 적용하면, 150만명이며, 지금보다 120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호주정도의 보건의료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 규모는 정확히 신규 인력 120만 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새로 그것도 공공기관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해서 위치하는 지역보건의료센터에서 3차 병원에 이르기까지 공공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조직망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한 우선과제로서 첫째, 국립대병원 등 2차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특수법인형태로 민영화되어 있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법인을 폐지하고 과거와 같은 국립기관으로 환원하여 광역단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신설하여 2차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공공병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일반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이 마련되어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충된 공공병원을 고리로 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지역보건의료센터와 3차 공공병원을 연계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1차 의료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센터가 신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적확대와 체계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병원서비스 생산구조를 '현대화'하며, 병원서비스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병원서비스 권위주의 탈피하며, 포괄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기전을 차단하면서 자본운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민간병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

우리나라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병원의 상업적 성격은 앞서 지적한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병원이 사회의 공적 재산으로서 자기 역할을 담당하게끔 하는 제반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민간병원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 수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영리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병원을 제외하면 법적으로 민간 비영리로 규정될 수 있는 전체 민간병원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민간 비영리병원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 비영리병원에 대한 공적지원과 관리를 강화시키면서 민간병원의 공공적 성격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자치의료

자치의료는 노동자·민중이 보건의료서비스 생산과 분배에 참여하는 기전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확보함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일반의 불신이 높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의 요구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밖에 없을 것이다. 지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보건의료체계의 운영에 지역의 통제와 관리가 배제되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공급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의 확립이 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보건의료자치제'라 한다.

①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신설

· '(가칭) 보건의료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그 법령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국가 및 자치단체로 명시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명문화

· 광역 및 기초단체에 지역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역보건의료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

· 지역보건의료위원의 경우 지역별 적정인원에 대하여 직선 및 간선제를 통하여 선출하여 지역보건의료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도록 함.

· 광역의 경우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보건(위생)과를 광역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산하로 분리·확대하여 독립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보건소를 광역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산하로 분리·확대하여 독립시킴. 이들 기구는 기존의 행정체계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을 갖도록 함.

②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역할

- 지역 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 주체
-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기획, 설립, 관리에 대한 책임 및 권한 부여
- 관할 지역 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기획, 설립, 관리와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보건의료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도 평가에 기초하여 필요한 자원의 배치 및 확충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의 책임을 짐.
- 관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신 증축 허가권 부여
-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에 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
- 1년 회기별로 관할 지역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을 배치 혹은 확충함.
-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역사회 필요에 대한 평가와 자원계획을 근거로 중앙정부와의 협약(agreements)을 통해 구체화하며, 중앙정부는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서 소요 재원을 지급할 책임을 짐.
- 관할 지역 내 비영리 민간병원에 대한 예산 및 기술지원·평가·감독, 사정권을 부여.
- 지역사회보건사업의 기획 및 관리의 핵심 주체

③ 보건의료자치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 국가보건의료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 조성 및 조달의 책임주체
-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기본 전략과 원칙 수립
- 지역보건의료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각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 소요 예산 지급
- 보건의료서비스 및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④ 보건의료자치제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기전

- 지역보건의료위원장 및 일부 위원에 대한 직접, 보통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 의료기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
-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 의견 및 주민 요구 반영

⑤ 보건의료자치에 소요되는 자원 조달

-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보건세의 신설, 일반조세의 일부, 민노당이 제시한 부유세 등을 통해 특별회계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자치에 소요되는 자원 조달
- 보건의료자치에 소요되는 재원은
 -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운영예산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
 - 지역사회프로그램 운영 예산

⑥ 보건의료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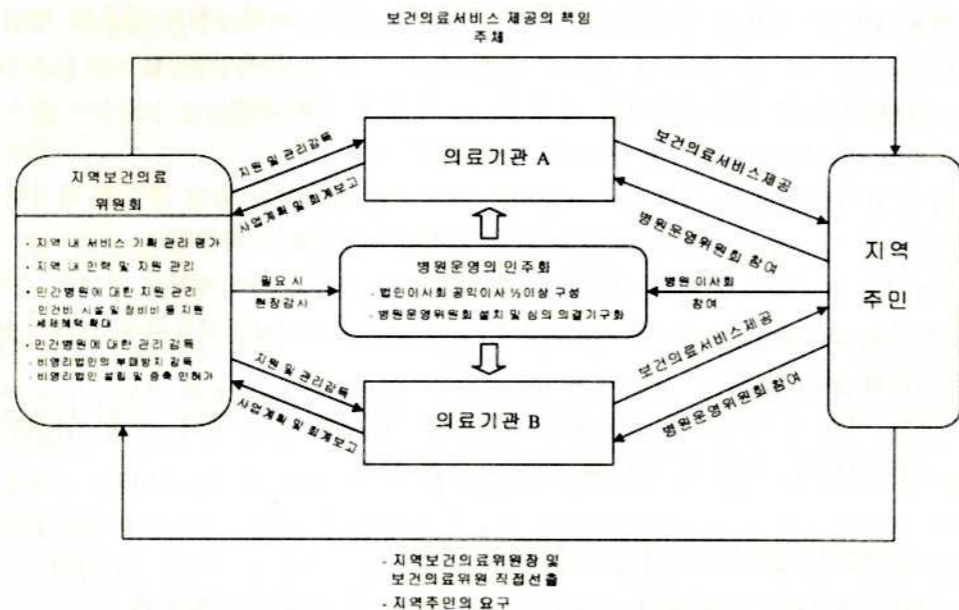


그림 7 보건의료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기전

5. 마치면서

-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은 실현 가능한 전략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지금의 계급역관계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사회변혁 이후에나 가능한 전략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사실 이 전략은 대중의 ‘몸’으로 체화되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한번 그려볼 수 있는 ‘모델’로 그치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대안’으로 그칠 수가 있다. 결국 이 전략실현의 핵심은 그것을 실현할 ‘대중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재의 계급역관계로 봤을 때 이 전략을 실현할 대중적 힘은 자본의 공세에 비해 아직은 매우 취약하다. 그리하여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는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 무기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중적 힘을 어떻게 조직하여 정치적 무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위의 전략을 실현하는 단계를 도식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① 자본의 시장화전략 저지 및 대안전략의 주체형성기 ② 대안전략의 부분적 도입기 ③ 대안전략의 체계모니 형성기 ④ 대안전략을 전면화하는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에서 반시장·반세계화 공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시키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정치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보건의료의 시장화·개방화를 위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인 쟁점을 언급하며 실현에 착수하고 있다. 그것의 법적·제도적 귀결은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이다. 2004년은 이러한 시장화·개방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WTO협상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시행계획의 첫 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며, 아울러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대립과 불만의 지점을 다른 단계로 넘기기 위한 ‘통과 지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수호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준에서라도 현 자본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공공의료 확충’이든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든 긍정적인 조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장화 반대’는 현 시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재편과 민중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모든 운동진영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위한 조직적 대오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이는 건강권 쟁취와 관련된 제반 요구투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러한 반시장공동전선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등 제반 사회영역의 반시장·반세계화 운동과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대중의 요구에 기반한 행동이 다층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운동은 심하게 얘기하면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중 자신의 요구에 의해, 대중 스스로 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실제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결핵환자의 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투쟁, 글리벡을 둘러싼 백혈병 환자들의 투쟁, 중소병원노동자의 공공병원화 쟁취투쟁,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료급여쟁취 및 확대투쟁,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적용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들 투쟁이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향한 요구와 결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직되어야 한다. 현행 문제투성이인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직은 절반이 채 안된다. 이제 개별적 당사자의 요구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전면화시킨 대중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셋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전형이 창출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구현의 핵심은 지역단위로 공공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이는 정치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토대로서 사회권력 형성으로, 대안권력으로 자리매김될 수가 있다. 특히 각 시군구단위별로 노동자와 농민이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공공병원설립을 중심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교육과 제반 복지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는 매개가 많은 바, 지역보건의료단체, 농민운동, 공무원노동조합운동, 사회보험노동조합운동, 보건의료노동조합운동, 전교조운동 등이 '지역'단위에서 공동활동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민중연대'의 구현이며,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시스템도)의 민주주의와 민중적 통제를 구현시킬 수 있는 대중적 힘과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위의 전략에 실천적으로 복무할 보건의료인 주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의사의 역할과 힘은 막강하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민중적 조직화는 위의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 더없이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지는 자본의 의료서비스 통제와 간섭에 맞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인 대중운동의 조직화는 앞의 세가지 과제가 실현되는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끼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의 전략을 매 시기마다 지속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의 지속성과 집중성, 전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조직'의 형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정치조직'은 무엇보다 '대중운동 및 투쟁'의 형성과 구축에 복무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제도적 영역'을 결합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나침반'과 '지도', 망망대해에서 뱃길을 찾는 데에 필요한 '등대'의 역할을 하는 전략과 투쟁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공공성 확대를 위한 과제

최준영(문화연대)

문화공공성 확대 : 배경 설명

문화공공성. 어쩌면 '문화'와 '공공성'이라는 단어의 조합 자체가 어색할 수도 있겠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 '소비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문화생활이라 일컫는 것의 대부분이 개인의 소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들이다.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음반을 사서 듣고, 또 음악과 미술을 배우고 즐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우리는 문화와 문화생활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문화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급격한 자본주의화로 인해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해버린 문화의 영역을 민중들의 권리의 영역이자 사회공공영역으로 복원하자는 것이다. 즉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문화권)이며, 따라서 사회공공영역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공공성' 확대를 주장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문화영역을 통한 사회적 지배와 이에 대한 저항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배가 관철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화를 정치, 경제와는 다른 자율적 영역으로만 인식한 근대적 사고는('문화=예술'로만 인식하는 사고), 이러한 문화의 사회적 영향력 특히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배의 문제를 망각하게 한다. '문화공공성'의 문제는, 따라서 국가와 자본의 영향력이 관철되는 문화영역에서의 저항을 조직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특히 미디어의 영향력과 그 속에 관철되는 자본의 논리의 문제나 공공적인 공간을 없애거나 파편화하는 공간의 문제 등은 이제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서도 인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공공성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문화의 위기에 맞선 대안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으로서 문화공공성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속화 :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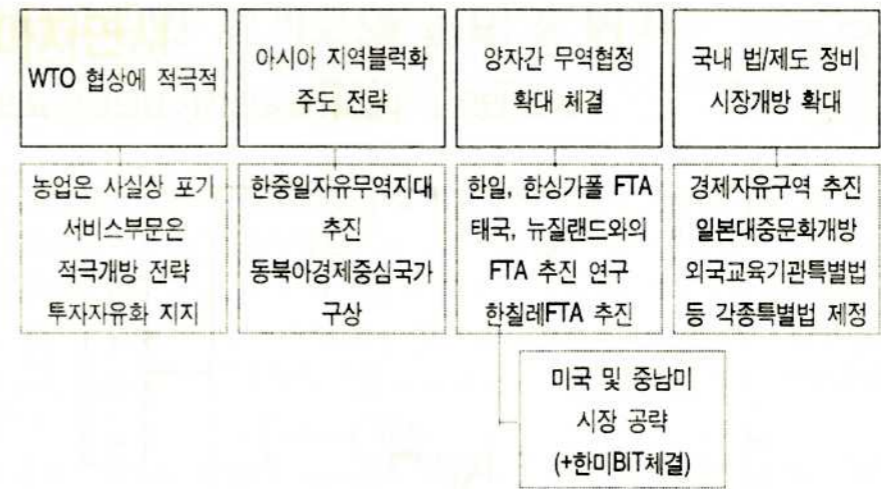
5차 WTO 각료회의의 결렬이 곧바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무역자유화, 시장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경우, MAI¹⁾의 결렬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확대²⁾나 양자간 무역협정(BIT, FTA)의 체결³⁾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한국의 경우 '시장개방 모범국'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개방화,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과 2003년에 WTO 서비스협상 양허요청안 및 양허안을 각각 제출하였고,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이은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최근 몇 년간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경제블럭화 논의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시장개방의 흐름을 선도하고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을 발표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을 통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지난 9월 16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의 경우에도, 일본과의 걸끄러운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동북아 경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맥락과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1) MAI는 OECD 국가 간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98년 프랑스 등이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면서 협상중단을 선언하여 결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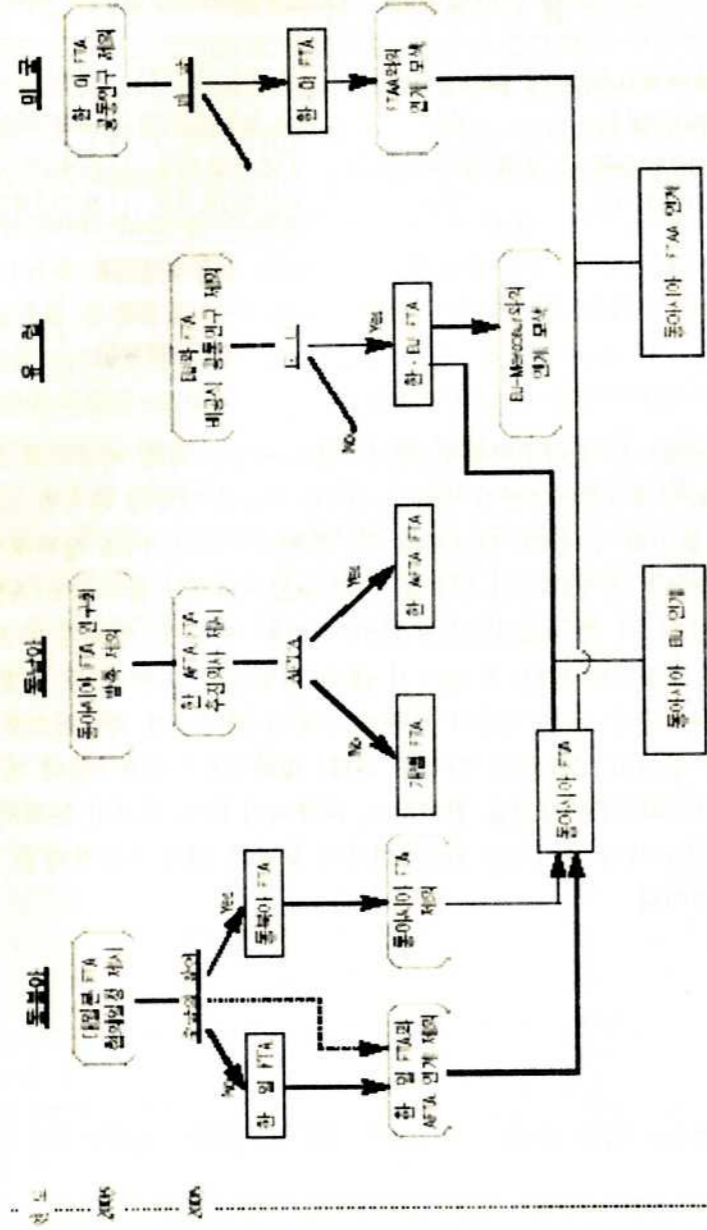
2)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주도로 중미 자유무역지대와 전미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미주지역의 지역 경제블럭 형성에 대응한 아시아 경제블럭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의 주도권 다툼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얼마 전 끝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다자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금년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이루어낸 가치있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3)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의 수는 267개이며, 이 중 184개가 발효 중이라고 한다.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양자간무역협정을 확대 체결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연구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2005년을 FTA 정책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로 지적하면서, 2005년을 전후로 미국, ASEAN, EU 등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중 ASEAN과의 FTA 추진의 경우, 1) 동북아 FTA를 통한 방안 2) 한국 단독으로 체결하는 방안, 3) 필요시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개별지역과의 FTA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아시아지역블럭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금까지의 역할이나 실제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합의하고, 태국와의 FTA 체결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V-4>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 전략



자료: 장민(2000)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문화의 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 가속화는 문화영역에서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헐리웃 영화의 세계적 독점으로 인한 전세계 영화산업의 붕괴이다. 헐리웃 영화가 전세계 영화시장의 85%를 독점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영화산업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헐리웃 영화의 시장 장악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고사와 미국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문화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에서는, 자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이른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송 및 스크린쿼터제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음반, 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시장개방으로 인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과 이로 인한 자국 문화산업의 붕괴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속화는 다양성과 정체성의 위기와 함께 공공성과 문화적 권리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발전' 논리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의 심화는 보편적 문화적 삶의 질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의 철회,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체계의 붕괴,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기는 빈곤의 심화와 함께 사람들이 문화생활, 문화적 가치의 실현을 경제적 빈곤의 해결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로 만들어 문화적 권리의 후퇴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인쇄, 영상 제작 및 배급, 사운드녹음 등의 부문을 개방하였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시청각분야에 한해 WTO에 제출한 양허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의 체결에 임하고 있고,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스크린쿼터제를 축소 혹은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TO 서비스협상이 예정대로 200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면, 한국의 문화 또한 획일화와 독점화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한국의 문화영역 개방현황 (○ : 완전개방, △ : 부분개방, × : 개방안함)

구분	개방여부	
인쇄·출판	△(출판 : ×)	
시청각분야	영상 제작 및 배급	○
	영화 상영	×
	라디오 및 TV서비스	×
	라디오 및 TV전송서비스	×
	사운드 녹음	○
오락, 문화서비스	기타	×
	엔터테인먼트	×
	뉴스에이전시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자료보관소 및 기타 문화서비스	×

- 출처 : 문화다양성연합(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⁴⁾, 2002년 4월

문화공공성 확대를 위한 과제

문화공공성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문화는 자본과 상품의 대상이거나 소수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적 실천의 산물이며, 따라서 모든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문화공공성은 문화를 향유하는 공공재원의 확대와 활용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개인에게 관철되는 것이 상당부분 문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작동, 공간의 분할 전략 등을 통해 자본주의적 삶의 양태를 개인과 공동체에 체화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 -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과 공간의 공공성 강화 등 - 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문화공공성 확대의 문제는 당면한 WTO 서비스협상과 FTA 확대 체결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화 흐름에 맞선 투쟁의 전략으로 제기되는 과제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만연

4) CCD는 1998년 캐나다 퀘벡의 문화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출판, 영화, TV, 음악, 공연 등 시청각 분야를 중심으로 한 30여개 이상의 문화전문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CCD는 문화가 국제무역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해 각 국의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성명서와 행동강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자본주의적 지배구조를 문화적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제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대중저항주체를 형성 - 특히 지역의 투쟁주체 발굴 - 하는데 있어서도 사회공공성, 문화공공성 확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정리한 5가지 제안은 단,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공공성 확대의 과제이다. 물론 문화영역의 범위가 넓은 만큼 더 많은 과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문화연대가 진행하고 있거나 2004년의 정세적 중요성으로 인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1) WTO 서비스협상, FTA체결저지 투쟁 : 사회적 연대의 강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문화의 위기 - 다양성, 정체성의 위기, 공공성과 문화적 권리의 후퇴 - 에 맞선 문화영역에서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내야 한다. 특히 2004년이 WTO 서비스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점, 그리고 한국이 2005년을 전후로 FTA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2004년 다자간,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WTO 서비스협상 및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공공영역의 축소'에 맞선 연대투쟁과 대안적인 정책의 제기를 통한 공세적인 투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① WTO 서비스협상 저지 투쟁

문화, 교육, 의료, 전기, 철도 등 사회공공영역의 시장개방을 다루는 WTO 서비스협상의 진행은, 향후 WTO체제의 출범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화영역의 경우, 2005년 <문화협약> 체결을 앞둔 상황이지만 WTO 서비스협상과 각종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의 체결의 진행 과정에서 문화의 상품화, 문화시장 개방의 위협 또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2004년에는 WTO 서비스협상을 저지시키기 위해 문화운동을 포함한 각 사회운동진영의 적극적인 투쟁과 연대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이를 위한 연대의 전망을 찾아가야 한다.

② 스크린쿼터제 축소와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투쟁

청와대와 재경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가 헐리웃 독점을 방지하는 문화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이 결코 민중들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인대책위, 한미BIT, KoPA 등을 중심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 폐지와 한미투자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③ 일본대중문화 전면개방 및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투쟁

최근 문화부가 발표한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과 방송위원회의 '일본방송 2차 개방(안)' 등이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동북아지역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어온 대중문화개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0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대중문화 전면개방을 저지하고 이후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2003년 하반기부터의 투쟁이 요구된다.

2004년의 정세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운동 각 영역간의 연대투쟁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문화, 교육, 의료, 농업,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만이 2004년 주요한 정세적 계기들을 돌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문화협약>의 체결

<문화협약>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해 개별 국가 및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가 파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문화'는 그 고유한 가치 - 공동체 및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삶의 양식이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 로 인해 상품과 무역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 속에서 교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협약> 추진의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문화협약>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2002년 3차 INCD 총회 때부터인데, 이 때부터 전 세계의 문화NGO, 예술가들이 <문화협약>의 체결을 각 국 정부에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2차 CCD 총회와 2004년 4차 INCD 총회를 거치면서, <문화협약>을 유네스코를 통해 체결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논의되었다.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협약> 체결 계획은, 무엇보다 200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WTO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문화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하면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큰 계획이기도 하다.

2003년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협약> 추진 안건이 영미권 5개국을 제외한 60여 개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이제 <문화협약>은 2년간의 협약(안)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33차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 회원국 2/3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 체결되는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문화협약>의 체결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유네스코 재가입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 헐리웃영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문화산업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협약>이 미국의 문화패권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2년동안, 각 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문화협약>의 체결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문화협약>은 그 자체로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3년 '세계문화부장관회의'는 <문화협약> 초안을 논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문화NGO와 예술가들의 바람에 상당히 못미친 것이었다. 협약의 4조 1항에서는 "본 협약이 기존의 여타 국제협약 하에서 조인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대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권리 및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 이미 개방된 분야에 대해 <문화협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2) 여전히 무역협정에서 문화영역이 다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며, 이 안대로 체결된다면 <문화협약>이 다분히 상징적인 '선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협약>의 체결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문화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적 공공부문의 공공적 활용 증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전국적으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1년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은 887개⁵⁾에 이르며, 이 밖에도 공공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 - 학교도서관,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공연장,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 까지를 더한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일례로 2000년 현재 대학도서관이 420개, 학교도서관은 7918개 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대부분이 운영 프로그램의 빈곤, 전문운영인력의 부족, 재정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⁶⁾. 공공문화기반시설의 공공적 활용 증대를 통해 문화공공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① 학교 - 공공문화기반시설 연계 방안⁷⁾

5) 2001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427개, 등록박물관 222개, 등록미술관 51개, 문화의 집 86개, 문예회관 101개 등 총 887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조성, 운영 중에 있다. -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년

6)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진행한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도에 연간 시·군·구민회관 문화행사 참여가 평균 0.37회, 연간 복지회관 문화행사 참여 평균 0.23회, 연간 청소년회관 문화행사 참여 0.24회, 연간 문화원 문화행사 참여 0.06회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방안의 목적과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학교 안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현재 공교육은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가 주로 입시와 진학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많은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진학에 필요한 교과목 지식을 기능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인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하여 공교육 과정에 도입하는 노력을 통해, 기능과 단순 지식 전달 중심에서 감수성과 창조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둘째, 지역의 공공문화기반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시설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봉사하며, 인프라 중심의 시설에서 콘텐츠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교육 내의 문화예술교육의 장소로 공공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본래 설립의 근본적인 취지인 문화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역 학교들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학교 내의 도서관, 특별활동을 위한 시설·기자재·프로그램·교사의 측면에서 수요의 증대에 비해 공급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바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문화기반시설을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할 경우, 문화기반시설의 상시적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학교로서는 부족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시설/전문교사를 해당 문화기반시설 및 관련 네트워크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공공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는 막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발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의 시민들이 공공문화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문화프로그램들이 부재하다는 점 때문이다. 첫째가 시민들의 참여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지역의 문화인력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문화콘텐츠의 문제이다.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들이 적정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공간, 인력,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하여 지역의 문화지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문화적 활동에 있어 접근과 기회를 보장해주는 문화복지의 발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의

7)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 방안'(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2003. 9.)에서 발췌.

연계 부재로 인해, 학생들은 문화적 욕구가 있어도 사교육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간, 지역 간 격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의 개방과 공적 예산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실시는 문화예술교육은 특수한 교육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 투자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특히 문화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② 노동조합 - 공공문화기반시설 연계 방안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라면, 노동시간의 단축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소비문화의 증대로 결과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비용의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또한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람들이 밤늦게 찾아갈 수 있는 '개방센터'를 만들어서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서비스와 상품을 소개하며, '민중대학'이나 영국의 '지역사회센터' 혹은 덴마크의 '생산학교' 등을 본따 노동자들과 실업자들(과 그 가족들), 퇴직자들, 연금수혜자들, 사춘기 연령의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이나 주제토론회, 영화클럽, 수리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보수를 받는 노동시간 이외에는 오직 소극적과 지루함만이 있을 뿐이라는 낡은 관습적 생각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반박해야 할 것이다. 또 노동조합은 상업적 소비문화와 오락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애초에 자신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협동조합과 결사의 전통과 노동자계급문화 서클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고, 또 자발적인 조직활동과 협동적 서비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수행할 공통적 이해가 걸린 작업계획에 대해서 시민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8)

③ 공공문화기반시설 인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9)

8) 앙드레 고르,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심광현, '현단계 문화개혁의 과제와 문화민주주의의 전망', 「문화사회와 문화정치」에서 재인용.

살펴본 대로, 전국에 도서관만 1만여 개가 존재한다. 1만여 개의 도서관에 두 명씩의 사서만 배치해도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전국의 6000여 공공문화기반시설에 학예직이나 연구관 등 전문직을 4명 배치하더라도 2만4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일이며 동시에 대학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공공문화 영역에서 필요한 지식, 태도, 능력은 기초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제공하는 지식, 기술, 능력과 가장 가깝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고 또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일자리를 늘릴 경우, 문학, 철학, 역사학, 인류학, 예술 등 기초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진출할 길이 넓어지고, 대학에서 기초학문이 살아날 조건이 만들어지며, 나아가 우리의 문화적 역량도 향상될 것이다.

④ 해외사례 :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와 스웨덴 '민중의 집'¹⁰⁾

공공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이 있다. 이 중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전국적으로 80여개가 존재한다. 사회문화센터 운동은 1965년에서 1985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존의 문화기관의 설립과는 다른 배경에서 제기되었다. 사회문화센터의 건립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기존 문화에 맞서는 대안 문화의 창조를 위한 운동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고 이 밖에는 1970년대 후반의 실업 문제 등이 사회문화센터의 주요 건립 이유이다. 사회문화센터의 31.2%는 폐공장을 개조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71개 사회문화센터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사회문화센터는 1년에 78,000번의 행사, 집단의 만남 및 그 외의 행사가 있었으며, 총 270만명이 사회문화센터를 방문하거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사회문화센터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 단순히 문화와 예술행사만이 아니라 문화적 간이주점, 문화카페, 혹은 공작실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간의 정보교류, 의사소통 및 고유한 창조적 행위를 벌이도록 하고 있다는데 있다. 독일 사회문화센터 중의 하나인 '다이트리히-코이닝-하우스'의 사업영역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다이트리히-코이닝-하우스의 사업영역과 프로그램>

1) 대규모 특수행사 영역의 프로그램

- 각종 콘서트 : 록음악, 레게, 재즈, 포크, 합창과 오케스트라, 민속음악 등

9) 강내회, '경제적 이성 비판과 사회발전 : 문화적 권리,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10) '문화의 집 모델 및 운영방안에 관한 외국사례 조사연구'에서 발췌.

- 춤과 디스코 : 중년 축제, 여성무도회, 장애인디스코, 노인무용, 십대 파티, '최고의 중년 축제' 등

- 축제와 대규모 행사 : 세계어린이날, 동양의 밤, 배꼽춤의 날, 겨울시장 등

- 기타 : 연극, 코미디 등

2)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사업 관련 프로그램

- 어린이와 가족사업 : 놀이방, 어린이를 위한 예술프로젝트, 연극워크샵, 노인들의 담소카페, 창조공간, 스포츠와 운동공간, 놀이와 짓기영역 등

- 10대와 청소년사업 : 청소년카페, 컴퓨터교실, 클럽활동, 워크샵, 교육과정, 특별행사 등

3) 노인사업과 프로그램

- 노인카페, 노인체육, 창조적워크샵, 독서, 노인합창, 문학과정, 오페라, 60세 이상이 행동하는 날, 크리스마스축제, 상담활동 등

4) 도시구역사업

- 도시구역 내의 집단과 동호인 모임과의 협동으로 워크샵 등 개최

- 외국여성들과의 만남

- 도시축제와 문화적 도시구역축제의 지원

- 놀이기구 대여 등

5) 스포츠영역

- 인근의 시설을 활용하여 실내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산악자전거 타기, 아이스하키, 테니스, 유도 등 진행

- 성인체조, 심장이식을 앞둔 환자의 훈련, 요가, 고혈압 환자를 위한 스포츠, 노인을 위한 수영과 물속체조, 탁구모임 등

- 어린이를 위한 유도, 발레, 태권도, 오전의 학교체육 진행

스웨덴 민중의 집은, 1900년대의 중요한 해방운동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민중의 집은 매년 3천5백만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그 사회적 활용도가 높다(스웨덴 인구는 800만을 조금 넘는다). 민중의 집은 스웨덴 전역에 700여개 이상이 존재하며, 민중의 집에서는 모임, 회합, 회의, 의회, 공부,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 사람들은 공부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강연을 듣고, 영화와 전시를 보기 위해 민중의 집으로 모이고 있다. 매년 민중의 집에서는 50만 가지 이상의 활동이 벌어지며, 주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민중의 집 주요 프로그램>

- 1) 연맹이나 위원회 모임 2) 학습
- 3) 댄스와 사적 파티 4) 영화
- 5) 강좌와 세미나 6) 체조와 스포츠
- 7) 지방자치단체의 모임 8) 강연

- 9) 취미와 수공예
- 10) 토론
- 11) 일일시장과 바자회
- 12) 전시회
- 13) 동호인연극
- 14) 합창
- 15) 빙고
- 16) 주말학교와 종교활동
- 17) 연주회
- 18) 주말의 집 여가활동
- 19) 소년, 소녀단 활동
- 20) 전국극장연합의 순회활동 프로그램 등

4)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과 공공적 개입

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든 미디어의 영향은,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관철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발달,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구조 등에 기반한 새로운 공공영역 창출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 - 디지털 기술의 대중화, 인터넷과 연계한 영상소통의 확대 등 - 는 대중들이 자신의 사적인 기록에서부터 정치적 이슈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까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기반한 지역운동과 연계한 형태의 미디어문화운동의 전개는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위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KBS <열린채널>이 3년째 방영되고 있고, 2002년는 광화문에 영상미디어센터 MediAct가 개관을 하고 충무로 영상센터 활력연구소가 개관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역 미디어센터 건립 계획이 추진 중이다. 미디어센터 등 공공영상문화시설을 활용한 미디어교육과 소통 이외에 제기될 수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공영상문화시설의 확대 및 공공영상문화정책의 수립
- ② 'Public Access' 실현 : KBS <열린채널>에 대한 개입
- ③ 소출력 라디오 활성화 운동
- ④ 작업장 감시 문제를 포함한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견제

5) 도시 공간의 공공적 재배치 : 광화문 문화광장 조성

도시 공간은 무질서한 듯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삶의 질서에 따라 배열되기도 하며, 역으로 그렇게 구성된 공간은 그 속에 담기는 일상적인 삶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틀지우기도 한다. 이를 보여주는 공간현상의 진수는 '도시(공간)의 양극화'이다. 강남구가 첨단산업, 신세대소비문화, 중산층의 요소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반면 구로구가 사양산업, 노동자문화, 신하층의 요소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분화되는 것은 이의 극명한 예가 된다. 양극화는 자본주의하에서 항존하는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경향이 도시공간에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것에 다름 아닌데,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일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¹¹⁾

광장, 공원과 같은 공공적 공간의 축소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예전에 '공터'라고 불리었던 곳을 생각해보자. 동네마다 있었던 공터는 여백과 비움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 문화의 중심이자 소통과 교류의 중심이었다(집회나 모임의 장소, 약장수의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지만 자본주의적 도시개발은 이러한 공터나 광장을 효율성의 논리를 근거로 채워버렸다. 빌딩과 아파트로 차버린 광장은 이제 소통과 교류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

가장 가까이 집회를 생각해보자. 집회를 가질 만한 광장과 공원의 부족은, 보수우익단체들의 집회장소 선점과 함께 집회를 성사를 어렵게 하고 있고, 인도의 점유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를 듣기 일쑤다. 공간의 사유화와 자본주의적 합리화로 인한 '광장'의 부재는 공적 담론의 형성과 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공공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광장, 공원 등의 축소에 맞서 이를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 문화광장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권력의 중심으로만 인식되는 광화문, 세종로 일대를 공공공간으로 재배치하자는 주장이다.

광화문 광장 조성과 관련한 논의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는데, 최근 '신행정수도이전을위한특별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광화문 광장조성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의 비용마련을 위해 정부종합청사, 문화부 등 광화문 일대의 건물을 민간매각할 계획이지만 이는 광화문 일대를 권력의 공간에서 공공공간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광장 조성과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①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문화생태공원화
- ② 청계천 복원 문제

11) 조명래,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반공공성-공간의 새로운 기획을 위하여', 『문화과학 12호』

시장화 · 개방화 저지, WTO · 경제특구 폐기와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

- 교육 · 문화 · 의료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현실적 의미와 당면 투쟁 과제

송유나(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1. 들어가며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대중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 반전 · 파병저지 투쟁, 경제특구 저지 투쟁, 기초법 · 연금 개혁 저지, 철도노조 파업, 전교조의 NEIS 저지 투쟁, 그리고 영원히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열사들의 죽음. 잔혹한 2003년이 어두워가고 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처절한 절규로부터 촉발된 생존권 쟁취 투쟁, 그리고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중심으로 힘겹게 힘겹게 성장해 온 한국사회 노동자 · 민중운동 진영은 IMF 이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차마 외어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수많은 투쟁의 현장에, 준비하지도 못한 채 나서야만 했다. 때로는 격한 감정에 휘말려 싸우기도 했다. 때로는 이 투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동원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쏟아지는 투쟁의 사안들을 보며, 그저 막연히 관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죽음 앞에서, 당장 내일 목을 죄어올 것들에 대해서도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아니면 오늘의 나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초라한 낙관으로 버티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패배감과 무력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친 몸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우리는 지금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승리의 기쁨을 잠시라도 누릴, 그 여유조차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우리의 조직력은 여전히 미약하며, 자본과 정권의 대처능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직력을 키우고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 대중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분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력을 키울 수 없는 조직구조'에 갇혀 있고, '대중 투쟁이 불거지고 있으나 확장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총파업이 불발되는 이유는 그 총파업을 할 수 없는 '조건' 때문이며, 조직된 대오 ·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 이외의 대중 투쟁을 조직하고 기획하지 못하는 운동적 '관성' 그리고 운동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자본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그들로서도 처절한 본능에 따라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으며, 자본운동 · 사회질서 전반을 총체

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운동 재편의 전략적 · 총체적 성격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노동자 · 민중의 투쟁 역시 질적 · 구조적 재편을 동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고전적인 생존권 투쟁의 ABC를 넘어 새로운 투쟁이 이미 무한히 확장되고 있음에도 투쟁 전선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익숙한 투쟁 전술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도 파괴적이지도 않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미 늦어버렸단 말인가? 역설적으로, 전환의 기획은 아래로부터 생성되고 있다. 이미 대중들은 본능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계급적 자아를 곳곳에서 끄집어내고 있으며, 그에 나설 준비 역시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로써 운동의 기반을 넓혀가기 위한 자신감과 힘, 전략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내는 일이다.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듯 거창하게 화두를 던지는 이유가 이 투쟁이 만병통치약이라거나 유일무이한 투쟁이라 주장하려 함은 아니다. 단지 우리 운동의 관성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 투쟁의 구획을 넓히기 위해서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은 현실 투쟁이 처한 고립과 단절, 방어적 성격을 오히려 공세적인 것으로 전화시켜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로써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대중 투쟁 영역의 계급적 성격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대중주체 형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사회적 책임, 국가를 둘러싼 계급 투쟁의 장을 격화시킬 수 있으며, 이 국가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 전선이 더욱 강고하고 단일하게 구축될 수 있는 토대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 글을 통해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논쟁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욱이 2004년 아니 이후의 투쟁에 있어 주체를 세우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실질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이 글은 우선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그동안 전개된 투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속에서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국가와 자본의 재편 전략 -시장화 · 개방화, WTO · 경제특구 등- 이 노동자 · 민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속에서 당면한 투쟁의 목표와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자. 특히 정세의 역동성에 대한 판단은 구조조정 저지 ·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방어적 투쟁을 공세적 투쟁 -사회공공성 쟁취와 삶의 질 확장, 이를 둘러싼 대 국가 투쟁 전선의 확장- 으로 전화해야만 할 필연성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면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교육 · 문화 · 의료를 중심으로 한 투쟁의 과제에 대해 미력하나마 제출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 투쟁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치열하게 부딪혀 나가야만 한다.

2. 사회공공성 투쟁의 전개와 발전과정

공공성·사회공공성이라는 화두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진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무엇인가에 있다. 더욱이 이 투쟁이 향후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민중의 삶 전반을 피폐화시킬 수밖에 없는 기획이며, 이윤과 경쟁 논리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시장화 경향 그 자체이다. 그러기에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은 경쟁과 이윤논리, 시장화·개방화¹⁾에 맞서는 투쟁 전반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된 투쟁이라는 점에서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은 노동자·민중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어적 투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를 확장해나가는 투쟁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투쟁은 발전해나갈 수밖에 없다. 즉 시장화·개방화 및 국가책임의 방기라는 현재의 국면에 대항하는 방어적·정세적 투쟁의 의미를 가지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국가성격을 전화해나가는 투쟁의 발전 속에서만이 현실 투쟁의 쟁점 역시 해결될 수밖에 없다³⁾. 이러한 점에서 사회공공성

1) 시장화·개방화·세계화·자유화. 다양한 개념이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현재의 구조조정과 세계적 차원의 자본 재편의 정세를 설명해주는 '분석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투쟁의 목표와 주체의 계급적 대항을 보여주는 개념으로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중적 차원에서도 이 개념에 대한 긍정적·발전적 인식이 더 크다. 그러기에 자본 재편의 전략적 방향을 공격하고 이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의 재구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이 표현에 대해 상당히 서운해 할 동지들이 많을 것이다. 제대로 된 임단협 투쟁조차 해볼 겨를도 없이 교육공공성 쟁취 투쟁으로 10여 년을 넘게 싸워 온 전교조 노동자들과 공공의료의 가치를 노동조합 시작에서부터 내걸고 선도적으로 투쟁을 이끌어 왔던 보건의료 노동자들,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해 파업의 기록을 갱신해 온 사회보험 노동조합, 사회보장·사회복지 투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수 많은 대중활동가들이 존재한다. 다만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것이 최근의 일이며, 이제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사회화시켜나가고 전체 투쟁의 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라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운동의 구조가 사회공공성 투쟁을 부문적 투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는 점에서 이 구조를 전화시키는 일 역시 당면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3)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을 통해 우리는 세계화·자유화·개방화 등 술한 투쟁을 병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름이 거창한 만큼 참으로 어려운 투쟁이라 할 것이다. 대적전선을 설치하기도 어려웠으며, 투쟁의 구체적 목표를 잡기에도 수월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투쟁의 주체를 세우기도 힘겨웠다. 이 투쟁이 추상성을 극복하고 구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방어 투쟁의 성격을 오히려 진지를 구축하는 공세적인 투쟁의 성격으로 전화시키는 것에 있다. '시장화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시키는 것'이라면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투쟁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이다. 즉 방어와 공세 양자의 관계는 선-후의 관계라기보다 상호작용하고, 상승·발전하며, 오히려 공세를 통해 방어가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쟁취 투쟁의 전략적·중장기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이 처한 현재의 구조적·조직적 위기 역시 투쟁 전선의 질적 전화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공익이라는 이름은 파쇼적 군사정권의 효과적 동원 전략의 하나였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전일적 통제구조는 한국사회 자본축적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온 주요한 동력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공공·공익이라는 화두는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통제구조를 반영하는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철도·전력·가스·도로·항만 등 국가기간산업이 자본축적의 필요조건이며, 교육시스템이 노동력의 공급⁴⁾ 수단이자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쉽게 확인된다. 나아가 '생산적 복지'라는 김대중 정권의 수사나, 4대 보험 체계가 형식적이거나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이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하다.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에서조차 공공성 혹은 소위 사회복지 투쟁에 대해 회의를 가지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⁶⁾. 그러기에 우리는 그 동안

4) 한국사회의 반공·발전주의 이데올로기, 권위적 국가권력의 전일적 통제 시스템은 대체로 교육과 군 대질서를 통해 재생산되어 왔다. 특히 교육의 경우 매우 위계화된, 차별적인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학벌·학력, 이에 따른 인적·계급적 연고가 그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화, 불안정 노동층의 확장에 있어 이 학벌과 학력, 이에 따른 평가 시스템은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범국민교육연대에서 주장하는 대학평준화, 중등교육 평준화의 문제는 지배계급의 재생산, 노동자 계급 내적 분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재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기에 교육 공공성 쟁취 투쟁은 개별 노동자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주어 노동력 시장에 개입할 조건을 형성해 주고, 공적 부담을 좀 더 늘려 노동력 재생산에서의 사적부담을 덜어주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즉 교육체계와 자본주의적 교육질서에 개입하여 계급재생산의 구조, 이데올로기 구조, 노동력 재생산 시스템 전반을 재편해 나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의 전략적 측면의 의미는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 가장 두드러진 모순은 사회복지가 사회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사회 권리 측면이 사장되면서 증폭된 사회 불안을 무마하기 위한 최소 비용의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공공근로는 대표적인 사회불만 무마 정책으로 장기적 전망도 없이 단기간에 대규모 실업자의 일부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대량실업 국면을 넘어가려는 시도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또한 이런 연장선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 이상의 의미를 법제화하면서도 그에 따른 재정적 확보와 시행령의 정비 없이 불만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급속히 법제화를 서두른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불만 무마의 물적 토대도 없이 이데올로기적 포섭 효과만 극대화한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서구의 구빈법은 빈민의 방치로부터 발생하는 범죄·파괴 폭동 등의 정치사회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관리하기 위해서이며,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가 되므로 경제정책의 하위 수단으로서 노동 통제와 사회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 "대량실업 실업운동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노동 2000년 겨울 통권 1호, 108쪽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을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몇 가지 논쟁 지점에 대해 간략히 둘러보면서 평가해보도록 하자.

먼저 소위 사회복지·사회개혁·사회보장 등의 이름으로 사회화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개념적·이념적 측면에서의 '혼란'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개혁 투쟁을 주요한 과제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97년 사회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2003년 3대 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공공성 강화·빈부격차 해소'를 내걸고 사회공공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소위 사회개혁·사회복지 등의 투쟁은 노동자·민중진영에게 그리 매력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사회복지 투쟁은 시혜적 투쟁, 노-자간 타협체계의 산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사회복지 체계가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계급 갈등과 분배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는 비시장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생산관계의 모순과 계급갈등을 은폐하는 구조로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서유럽의 케인즈주의와 이에 따른 노-자 타협체계⁷⁾,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투명

6)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을 논함에 있어 그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온 사회복지·사회보장·사회개혁 투쟁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사회공공성 투쟁은 사회복지 등의 투쟁으로 국가와 자본에 대해 시혜적 투쟁, 타협적 체제 안의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부정하는 투쟁이다. 이 부정의 의미는 주관적인 수준의 고집이 아닌 객관적인 정세에서 주어지고 있다. 우리가 제기하는 사회공공성 투쟁은 현실 투쟁이 간혀있는 운동의 구조와 요구를 다른 차원의 것으로 전화하자는 제안이다. 즉 노동'조합' 운동의 구조적 질서 내에서 익숙해져 온 운동의 질서를 바꾸자는 것이며, 국가와 자본에 대한 공세의 방식을 달리하자는 기획의 측면이다.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떻게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철저히 달려 있다.

7)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의 성장, 시민혁명 이후 국민국가의 형성, 노동계급에게 부여된 보편적 선거권을 통한 대중민주주의로의 확산, 이 세 가지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이지 일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권이 형성되는 시기는 노동자의 사회적 조건을 놓고 계급으로서의 자본가와 노동자가 치열한 각축을 벌였던 시기이다.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지가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획득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설령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달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요구와 압력을 용인해줄 수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답의 실마리는 시민권으로서 이해하는 권리로서의 복지 대신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로서 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지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의 재생산을 실현시킬 수 없는 조건들이 더 많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삶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측면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잣대가 필요하다. 목적으로서의 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복지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일 수 있지만, 수단으로서의 필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권리로서의 복지는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전자의 문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부에 따라서 분배의 몫이 정해진다는 생각은 애초에 폐기된다. 물론 그것의 현실 적용 측

한 경영과 건강한 노동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극복과 배제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위해 서로 협력하되 국민경제와 어려운 계층을 함께 배려하는 노사관계, 즉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⁸⁾ 등의 구상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유럽의 케인즈주의나 노-자 타협체제는 자본의 호황기에나 가능했던 일이며, 이 조차도 노동자 계급 투쟁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시혜적이건 아니건 간에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며, 이것이 노-자간 타협체제로 정착(?)될 가능성은 더더욱 전무하다. 세계적 차원의 자본축적의 위기가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태동시켰듯이 신자유주의적 위기 극복의 방식은 노동자계급에게 더 이상 내줄 것도 없는, 폭력적인 사회 재편과 노동시장의 무한한 유연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지연하는 방식으로, 위기의 잠재적 가능성을 더욱 촉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해결 가능성 역시 전무하며, 폭력적인 사회 재편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혜적 차원의, 노-사 타협적 체계라는 이름을 걸고, '무언가 내줄 것을 내주고, 얻을 것을 얻어보자'는 식으로 '협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바라거나, '타협의 정치'를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터무니없다. 이러한 환상은 그야말로 자본의 전략적 함정에 대책 없이 빠져드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힘겹게 투쟁으로 나서는 대중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처사이다. 그렇다면 자본 운동의 총체적 위기의 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은 무엇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가?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도 시장화·개방화 경향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기업이 발전해야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야 노동자가 먹고 산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더욱 더 착취하고, 고용을 줄이고, 불안정 노동 층을 확산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국가와 자본의 여력에 힘입은 사회복지, 허구적 타협논리에 근거한 사회복지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재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의미에서의 사회공공성 쟁취,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야만 하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의 파괴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 고리인 시장화·개방화의 경향, 이에 따른 국가의 사회적 소멸에 맞서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삶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요구하는 투쟁,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하라는 투쟁을 통해 시장화·개방화의 모순을 뿌리에서부터 제거해나가야 한다. 이 투쟁은 노동자 계급 내적 계층

면인 예산상의 복지 수준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음으로 후자의 문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정하고 복지 수준을 그것에 맞추는 기존의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건강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어야 하며 그런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 '권리로서의 복지와 민중복지로의 수용문제', 김종건, 사회복지와 노동 2000년 겨울 통권 1호

8)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망언을 일삼고 폭력으로 진압하고자 하는 현 정권에게 노사관계 개혁의 의지가 있거나 한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년 9월 4일, 노동부

분화에 근거한 개별 투쟁일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의 권리를 둘러싼 보편적 요구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본의 공세 하에 해체되고 있는 계급 내적 분단화와 갈등적 경향을 해소할 여지를 넓히게 된다. 더욱이 분산적인 전선을 확대·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보장·사회복지·사회개혁의 이름으로 전개되었고 전개되고 있는 제 영역의 투쟁을 사회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재구성의 과정은 비단 개념을 확장하고 이해를 넓히는 차원이 아니다. 자본 재편의 전략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운동의 구조와 질서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현장에서의 생존권 투쟁과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 간 일정한 오해와 갈등이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98-99년 공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공기업 매각 및 사유화 저지 투쟁을 전개하면서 공공성 쟁취 투쟁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투쟁의 의미를 둘러싸고 생존권 투쟁이나, 혹은 공공성 쟁취 투쟁이냐는 식의 논쟁이 잠시나마 전개된 바 있다. 지금도 노동운동 내에는 사회공공성을 다양한 요구를 묶어 놓은 합집합 이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 투쟁의 역사가 기업별 입단투를 중심으로 전선을 치고, 확대해나가는 양상이었다는 점에서 현장의 투쟁 사안, 현안을 둘러싼 투쟁이 매우 중요한 전술적·역사적 고리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현장에서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한국사회 자본 축적 운동이 처한 조건과 '궤'와 같이 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반공발전·자본축적 전략은 독점자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주도의 중화학·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내었다. 이로써 70년대 후반 이후 대공장·남성 중심 사업장에서 주체가 형성되고 투쟁의 힘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노동자 계급의 투쟁, 노동조합의 파업이 자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본주의적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입단투의 중요성은 생존권 쟁취, 민주노조 건설과 사수라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주요한 기풍을 이루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실리주의적·경제주의적·조합주의적 경향의 확산은 기업별 차원에서 전개되는 투쟁의 성과가 더 이상 전체 전선의 성과로 이어질 수 없는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 노동조합 '내적' 전투주의는 이제 더 이상 전투주의가 아니며, 노동자 계급의 분단화를 초래하는 구조조정 심화 과정에서 조합주의적 혹은 조합 '내적' 이해관계는 오히려 계급 내적 갈등 요인으로 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투적 투쟁의 기풍, 치열한 생존권에 기반 한 현장 투쟁의 성과를 일거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가당치도 않은 '타협주의'와 '합리주의'를 대안으로 내거는 일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정권과 자본의 이중대 역할을 자임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생존권 쟁취 투쟁이 아무리 입단협을 잘해도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국면에 다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입단투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사회적 현안을 현장에 침투시키는 일이다. 현장에서의 생존권 투쟁과 사회공공성을 둘러싼 제반의 투쟁은 대립

물 혹은 갈등관계이거나, 더욱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입단투를 둘러싼 현장의 요구 이외의 다양한 요구를 '묶어서' 하는 투쟁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분출하는 생존권 쟁취 투쟁이 사회공공성 쟁취의 요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해명하고, 서로 서로를 침투시키는 문제인 것이다. 나아가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이 투쟁을 계급적 입장에서 더욱 정치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획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둘러싼 '이해'의 차이가 빚어내는 문제들이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기관이며,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음은 부연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연적이듯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역시 국가는 우회할 수 없는 공간이다. 여기서 현존했던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회피와 부정의 논리를 양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저지하고자 했든가,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투쟁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현 시기 국가가 반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할지라도 우리 투쟁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국가와 국가정책을 둘러싼 투쟁을 비켜갈 수가 없다. 오히려 국가를 중심 전선으로 설정함으로써 분산되는 투쟁의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투쟁의 계급적 성격은 명확해진다. 국가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하여 개별 자본을 대상으로 싸우자 한들 결국 국가의 폭력성이 이를 저지시킬 것이며, 개별적으로 파탄난 투쟁 전선은 결국 해체·사망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현실 투쟁에서 방어하는 것에 만족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재편하고 무엇을 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인가? 계급 투쟁의 발전이 변증법적 과정이며 변혁의 길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더욱이 이 과정이 한 번의 단절로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아래로부터의 매우 인간적인·탈시장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를 둘러싼 현재의 투쟁 의미는 분명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국가부문·공공부문의 해체는 장기적인 변혁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이 구축해야 할 '이행'의 요소가 반민중적 방식으로 재편·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국 수준의 국가통제력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일국 차원의 계급 투쟁의 공간과 영역 자체를 잠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가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을 통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이 투쟁이 현재로서는 자본주의 내적 요구의 성격을 지닌다 할지라도 이것의 축적과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재편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철도산업의 국유화가 현재로서는 자본주의 이해관계 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민중적·친환경적 국가정책을 둘러싼 투쟁을 통해 계급적 긴장관계를 형성해 가는 주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과 4대 보험, 교육과 의료에서의 투쟁이 당장 공공의 것으로 전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공간에서 최소한 민중적 여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삶을 기획할 수 있는 충분한 상상력과 힘을 줄 수 있다. 바로 국가를 둘러싼 방어투쟁의 의미, 방어투쟁이 공세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으며, 공세투쟁은 결국 방어투쟁이 열어가야 할 지난한 과정을 일거에 얻어줄 수 있다.

간략하게 사회공공성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쟁점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 동안 전개해온 투쟁에 대해,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 보면서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의 발전, 즉 아래로부터 분출해 온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 동안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은 매각 및 사유화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로써 공기업의 소유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일정하게 촉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매각 및 사유화가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쟁취와 생존권의 문제가 융합될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었다. 더욱이 발전·철도·가스 등 조직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과업이라는 투쟁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고, 이들 국가기간산업의 사회적 성격상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각의 유보 혹은 정책에 대한 재검토 등의 성과¹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통제·민중적 통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 국가적·공공적 형태로 남는다는 것 자체로는 별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며, 국가기간산업의 민중적 운영과 나아가 국가 정책의 민중적 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죽도록 고생을 하고서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

9)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의 과정과 발전,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대응전략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발전전망", 송유나,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2002년,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물론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도 많다. 더 잘 싸웠으면, 마무리만 잘했으면. 그러나 철도·발전·가스가 공동파업을 성사시킨 것 자체가 성과이기도 하며, 역으로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내게 된 것이 우리 운동의 한계였다. 또한 가스 법안이 유보되고, 철도의 공사화 방안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정리되고 있으며, 남동 발전 매각이 지연된 것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기도 하다. 투쟁을 잘해서 막아낸 것이 아니라, 매각의 조건이 안되었고 재편 관련한 지배세력 내적 분열 때문이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조건이 만들어진 것도 투쟁을 통해서였으며, 그에 힘입어 다음 투쟁을 준비하면 된다. 조건이 달라진 상황이면 그에 따른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도 잘되지 않은 것만 조목조목 따져 비판하기에 급급한 지 생각해볼 일이다. 더욱이 그 동안 공공부문 사유화의 정세가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시장화와 자유화 조치 등을 통해 매각을 둘러싼 논쟁을 비켜나면서 실질적인 매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건 국가기간산업, 나아가 공공부문·국가부문 전반에 상업성을 인식하기 위한 전략은 시장화 공세와 함께 2004년을 관통할 것이다. 이로써 해당 부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상업주의적 관리 정책은 강화되어나갈 것이다. 이렇듯 사유화 저지 전선이 일정하게 전화되는 국면에서 공기업 노동조합이 향후 무엇을 중심으로 전선을 치고 나갈 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 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자.

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고민 그리고 실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히려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 공공철도에 대한 상이 아래로부터 준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사유화 저지라는 방어적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 영역 확대, 국가자본의 민중적 역할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때만이 현재의 방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객관적 인식에 기반한다. 더욱이 교육·의료·문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기초법·최저생계비·여성·장애인들의 투쟁 등 숱한 투쟁이 전개된 바 있다. 특히 이들 투쟁의 성격이 이미 민중의 삶의 권리, 이를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 공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소위 부문 운동 혹은 사회보장 정책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말던 이 투쟁의 공간은 이미 주류 운동의 질서보다 더 계급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의 공간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격, 자본운동의 총체적 재편 국면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다. 이 모두를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으로 총칭하건 아니건 간에 이미 민중의 사회적 권리의 확대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편 투쟁은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으며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이나 의료의 경우 당면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저지하는 방어적 투쟁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행의 기획을 제출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하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대중적 저변을 더욱 정치적이고 총체적인 요구로 끌어 올려 집중적인 투쟁 전선을 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감행해야만 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일 따름이다.

3. 전략과 기획 :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의 의미와 가능성

1)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우리가 바라는 평등한 사회는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을 가져가는 사회라고 흔히 정의하곤 한다. 그렇다면 그 '필요'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생산의 사회화가 진행되어 노동해방의 가능성을 담지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과연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인가? 98년 프랑스 실업자 투쟁에서 "개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달 지급하라!"¹¹⁾고 제기한 바 있다. 프랑스의 실업자들은 국가가 저소득층 국민에게 '조건 없는' 생존 소득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프랑스 정부에서는 최저착생소득제도(RMI)¹²⁾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실업보

11) 1987년 발표된 벨기에 샤를 푸리에르 서클 선언의 한 구절이다.

12) 착생이라는 개념은 외국인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생활의 뿌리를 내려 일반 시민과 동화되는 것을

힘 수급자격이 소멸된 실업자들에게도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생존보조금이다. 그러나 실업자 운동단체는 실업노동자에게만 한정된 국가보조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폐해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영국만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병원이 국유화되어 있고 의료진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극장, 오페라 하우스, 레스토랑, 빈민구호소, 여름 캠프, 수영장, 레저시설 등을 지방과 시의회, 자치단체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학 무상 교육이 실시된 시기가 현재의 한국보다 경제력이 못했던 시기였으며, 심지어 우리보다 열악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 남부 유럽과 제 3세계 국가에서도 대학 무상 교육은 이미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¹³⁾. 분명 이들 국가 역시 자본주의 국가이며, 유럽의 국가는 미국과 함께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물론 이들 국가의 현실이 앞서도 간략히 언급했듯이 서유럽의 코포라티즘 체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조차 자본주의의 축적의 위기 속에서 해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정도'만을 놓고 따져 볼 때 한국 사회의 상황은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따름이다. 타 국가의 사례가 어떠한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회화의 '정도'는 자본운동의 조건, 노-자 간의 역관계, 계급 투쟁의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것이다. 이들 사회의 구조가 노-자간 타협체계의 결과물이었다 할지라도 이 타협체계가 가능했던 것은 계급 투쟁의 힘이었으며, 또한 그 타협에 져버린 것 역시 계급투쟁의 힘을 잃었기 때문이며, 결국은 신자유주의 재편 전략에 의해 해체

의미하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거지나 유랑민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RMI를 최소적응급여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회보장 장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취업이 가능한 25세 이상의 실업자들에게 매월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략의 수준을 보면 개인의 경우 35만원 정도이고 자녀가 둘 있을 경우 75만원 가량이 된다. 그러나 RMI 대상자가 의료보험료나 주거세 등 세금을 면제받고, 주택 보조비까지 계산해보면 개인의 경우 61만원, 부부는 80만원, 자녀가 둘일 경우 105만원이 된다. 물론 프랑스 실업자들의 1500프랑을 더 인상하라는 요구는 무산되었고, 프랑스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사회보장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토대 형성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가와 자본의 변명이 허구라는 점이다. 자세한 것은, "지식사회의 이율배반", 이환식, 진보평론 5호 2000년 가을, 을 참조하길 바란다.

13) 프랑스의 경우 등록금이 거의 없고,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공공비용 즉 도서관사용료 및 기타 보험 경비 등에 지나지 않는다. 등록금이 거의 없으나 한데도 프랑스 국가에서는 학생들에게 주거비까지 지원한다. 학생주거보조금이 매달 100프랑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고 수업료를 약간 인상하자여 거센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이며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여기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수업료를 인상(한국 돈으로 10만원)했다는 이유로 저항이 일어났다. 이렇듯 유럽의 경우 대부분 대학교육의 공공교육화가 이루어져 있어 많은 돈을 내면서 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자세한 것은 "공공성에 입각한 공교육구조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천보선, '공공성에 입각한 민중진영의 공교육 재편', 2003년 7월 16일, 공교육개편 시론 심포지엄 자료집을 참조하길 바란다.

되건 방어하건 간에 그 역시 계급 투쟁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만이 사실이다¹⁴⁾.

경제특구가 이미 시행되어 노동자·민중의 삶은 이제 어느 한 군데 가릴 데도 없이 시장화·개방화의 공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농업·서비스 관련 협상 등 세계적 차원의 빅딜은 그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정보조차 없이, 개인의 삶과 무관한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의료·문화를 둘러싼 공공성 쟁취 투쟁은 여전히 부문 운동의 사안 정도로 치부되고 있으며, 시장화·개방화가 개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파괴적일 것이다'는 식의 묵시론적 예언만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한 번 개별 노동자의 한 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의료·교육·문화 지출 비용을 따져보도록 하자. 공적 지출이건, 사적 지출이건 간에 이 비용은 먹고 자고, 겨우 겨우 붓는 적금 정도를 빼낸 전부를 차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재생산을 유일하게 책임지는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에서 이 지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아니 개별 자본가의 책임에 대해서조차 따져보는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몇몇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 정도에서 학자금 대출 정도나 기업 '내적' 차원의 복지 정도가 논의될 뿐이지, 이미 이들 사안은 개별 노동자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어 있다. 한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의 노동자로 양육되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배치하고,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투쟁의 공간은 아직까지 '그림자'일 뿐이다. 물론 한국사회 투쟁의 조건은 기본급을 인상하는 투쟁만으로도 한참을 더 나아가야 하며, 노동조합 건설 조차에도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더욱 중요한 사회공공성,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이 눈앞의 투쟁으로 여겨질 리 만무하다.

14) 이러한 언급에 대해 반론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개량적 노동운동이 타협체계를 받아들였고, 결국은 노동운동이 망했던 것 아니냐? 그 놈의 서구 사례가 한국사회 노동운동을 왜곡시키는 개량화의 전형 아니냐? 이 말 자체는 맞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파괴를 이대로 방치하자는 것인가? 그냥 투쟁을 잘하자는 말은 의미가 없다. '무엇을 가지고 투쟁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중들이 노동운동과 계급투쟁에 점점 매력을 잃고 있는 것은 손에 쥐어지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투쟁을 해서 얻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있어야 다음 투쟁의 힘이 생긴다. 다음 투쟁의 힘이 생겨야 우리는 더 나아가 투쟁을 준비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운동의 발전,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 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이 현재의 조건에서 철저히 개량적일 수 있고, 자본주의 내적 투쟁이라 할지라도 이 투쟁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동력이 형성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현 조건은 그 개량의 국면을 창출할 여력이 없다. 여력도 없는 것에 의구심만을 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을 방기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 오히려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을 통해 투쟁의 계급적 성격이 명확해지며, 노동자 계급 내적 분화를 극복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국면기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둘러싼 투쟁은 오히려 전선을 확장할 수 있는 투쟁이라 볼 수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건 아니건 간에 임단투 및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제반의 투쟁이 자본주의 질서 내적 투쟁이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둘러싼 투쟁 역시 자본주의 질서 내적 투쟁이다. 사실 자본주의 틀 내에서 노동력을 사고 팔, 좀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하자는 투쟁이며, 이것도 안되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재생산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자 대중이 무엇 때문에 투쟁에 나서고 어떠한 쟁점에서 계급적 자아를 확인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며, 이 투쟁을 통해 계급적으로 단련되어 가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투쟁이 사실은 삶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투쟁 전선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삶과 생존의 문제가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해 막연히 느끼다가도 공공요금 인상의 문제를 내걸었을 때 비로소 한 번 뒤돌아보며, 외국병원과 학교에 대해 그저 좋게 느끼다가도 사적 의료부담이 늘고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에 대해 자본과 정권에서는 이미 그러했듯이 또 다시 서구 사례를 들먹이며, 타협질서를 요구하고 나올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타협의 정치를 구사할 자본의 여력과 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 자본축적의 위기가 케인즈주의와 코포라티즘 체계의 몰락을 선언하고 신자유주의 전략을 손에 손잡고 채택했듯이 타협적 질서의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주저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투쟁의 공간 하나 하나를 잃게 된다.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둘러싼 투쟁은 결코 자본의 시혜를 요구하는 투쟁일 수 없다. 이 투쟁은 지금 으로서는 시장화·개방화로 인해 철저히 파탄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최소한이나마 방어하는 투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투쟁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갈 수 있다. 더욱 발전하여 작은 성과라도 쥐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투쟁의 여력을 비축해나갈 수 있다.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걸고, 나아가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을 발전시켜나간다면 자본주의의 '안정된' 지배 질서는 결국 흔들리게 된다. 개별적이고 경쟁적이며,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과 분열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재생산'의 조건 전반을 흔드는 투쟁이기에 그러하다. 산별 건설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별 차원에서 진행되는 임단투의 내용, 산별적 요구를 더욱 확장·전환시켜 국가와 총자본 차원의 투쟁요구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충분히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2) 대중 주체의 형성, 대중투쟁 구획의 확장

기업별 임단투의 한계, 늑대 소년이 되어 버린 총파업 투쟁,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운동을 참으로 잘 아는 현 정권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힐난하면서 노동자 계급 내적 분

화에 기름을 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간을 부추기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사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실리 경제주의, 조합주의의 경향¹⁵⁾이 강화되고 있으며, 노동자 간 내적 분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정규직에게 돌을 던지고, 총파업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지도부를 지탄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또한 현장에서의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자고 한들 풀릴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 역시 해답이 아님은 명확하다. 먼저 우리는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의 구조적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대공장 중심의·단위사업장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투쟁의 지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치투쟁을 기획하고·감행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없다면, 그래서 임단투의 시기를 집중하고 단위별 요구를 모아서 무언가 해보고자 궁리할 뿐이라면, 총파업 혹은 정치적 투쟁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파업 투쟁이라는 전술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민해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운동에서, 아니 노동운동에서 파업 투쟁만큼 효과적인 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파업 투쟁이 물질적 힘을 가지는 것은 자본운동 축적 방향을 정확히 읽고 파악하는 상황에서도, 38일을 파업하고도 힘을 얻지 못했던 발전 파업이나, 파업이 오히려 재고물량을 유효 적절하게 해소해준 자동차 파업이 그것이다. 이미 자본운동의 축적 구조와 양태가 전화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투쟁의 중심 축이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오만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관성적 태도가 오히려 대중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해야 할 운동적 파업을 어느 사이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¹⁶⁾.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동원'하는 '파업'

15) 물론 노동조합에 있어 실리적인 고민은 이미 내재화된 경향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대중적 이해는 계급적 이해와 무관하게 독립되어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조합원 대중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매몰되기 쉬우며, 노동조합은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은 비정규직의 증가와 항상적인 고용의 불안,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온다. 이 속에서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은 노동자들의 급증하는 저항과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간, 분할 통치 전략을 동원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리적 경향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비정규직 및 불안정 노동의 현실과 무관한 사안으로서 분출될 수 있고, 더욱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관리를 통해 노·자 관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의 통치전략은 손쉽게 관철될 것이다. 지난 3-4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의 이러한 전략은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16) 노동조합의 중요성, 노동조합을 통한 계급투쟁의 발전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중심축으로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운동 질서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본 것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립물인 동시에 자본주의의 일부분이라는 변증법적 성격을 지닌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소득분배에 대항하고 있음과 동시에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경영에 대립하는 보완물로서, 그 같은 불평등한 분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타협적인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본축과 노동축 사이에 메울

투쟁의 전술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획은 과연 어디에서 발견될 것인가?

교육·문화·의료만을 보더라도 대중적 불만과 욕구는 조직하지 않아서일 뿐 매우 높다. 물론 이 영역에 대한 수동주의적 사고, 비주체적 사고로 인해 개별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야근과 잔업을 감내하고, 의료보험을 믿지 못해 사보험 들기가 일쑤이며, 파행적 문화소비 행태를 모방하기 위해 신용불량자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다. 공교육, 무상의료, 공동체적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실상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제기하지 않으면서, 개별 노동자들은 자본운동이 바라는 아니 자본 운동 축적의 새로운 국면에 무한히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무상화와 급식의 확대, 대학교육 평준화, 중등교육의 완전한 무상화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노동자 대중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쟁 요구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쟁도 아니다. 농민과 빈민층에 대한 무상의료 혹은 국가보조금 확대, 비정규직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고령인구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 도서관, 육아시설, 체육관, 장애인 복지관, 사회보호시설, 지역문화공간 등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지역의 문화 시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문화·교육 등 공공적 공간이 확장된다면, 우리 삶의 피폐함과 궁핍함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계급 투쟁의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퇴근 후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는, 엄청난 사적의료부담에 시달리고 노후를 걱정해 다달이 보험료 붓느라 고생하는 개별적 노동자는, 소비 지향적 문화에 빠져들어 허우적대는 젊은들은 충분히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투쟁은 정말로 쉽지 않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해왔던 노력보다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을 상황에 처하면서도 왜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는데는 그토록 주저하는가? 그 전략적 전환의 가능성이 이미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폭력성과 한국사회 종속적 자본운동의 미래가 이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은 바로 대중들의 자발성을 믿고 이에 의지하며, 그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투쟁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운동을 '조합'을 넘어서는 투쟁으로 확장해 나가는 투쟁이기도 하다.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사실상 입증해준다.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방식의 거래조건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통합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을 구체화한 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어느 경우에도 '노동계급' 의식을 창출해낸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독자적인 별개의 사회세력이며, 사회 속에서 독자적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자각을 형성한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적 의식과는 다르다. 사회주의적 의식은 노동계급이 헤게모니를 쥐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의식은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나아가기에 있어 필요한 하나의 단계이다." - 리처드 하이만,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운동, 연구사, 62쪽

3) 전선의 계급적 확장, 대 국가 전선의 단일화와 집중¹⁷⁾

4. 한국사회 자본 재편전략과 국가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권의 실체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드러나고 말았다. 현 정권은 대중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기치를 한 치도 놓지 않은 채 그 파괴적인 걸음을 더욱 빠르게 내딛고 있다. 과거 파쇼정권에서나 어울릴 듯한 폭력적이고 잔혹한 탄압은 이미 극한을 치닫고 있으며, 시장화·개방화를 둘러싼 조치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을 출범시킨, '개혁'의 기치는 중간층에 대한 차별적 관리를 통해 빛을 바래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은 이회창이나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세력과의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중간층을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노동운동 내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타협과 '은혜로운' 처사에 대한 기대를 일정한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지난 4·5년 간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국가발전주의·성장주의 이데올로기¹⁸⁾를 염원하는 대중적 기대심

17) 앞의 단락 중 국가를 둘러싼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통해 이미 다 설명하였으므로 따로이 서술하지 않는다.

18) 여기서 굳이 '신성장주의·발전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리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북아 구상 전략이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적 수사일지라도 한국사회 자본 재편의 주요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구상·경제자유구역 등은 시장화·개방화 저지 투쟁에서 주목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또한 자본운동의 위기관리를 위한 현재의 국가 역할이 발전주의·성장주의와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기치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번 비교해볼 만한 상황이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10월 유신을 계급역학관계에 따른 정치체제의 변모현상으로 파악한다. 1960년대의 고도 성장이 그 분배적 형평성을 잃었고 그에 따른 계급적 불만요소가 1960년대 말의 불황국면에서 사회의 제반 분야를 통해 위기로 현재화되었으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월 유신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의 안보위기도 사회적 혼란상황만 없었다면 10월 유신과 같은 정치체제의 변모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구조적인 설명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 유신 이후의 정당성 확보 노력은 '복지국가의 실현'이란 측면에 가장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중화학공업화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결국 중화학공업화는 10월 유신에 의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 요구에서 비롯된 목표, 특히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중화학 공업화가 1973년 1월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이라는 극적인 형태로 시작되고 처음부터 '수출 지향의 국제규모'를 추구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경쟁이 철저히 배제

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할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개방화·세계화'를 통한 기회의 창출' 등을 통해 성장·발전주의에 대한 환상에 대중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의 구조조정 정책이 자본운동의 위기 지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 극복과 이를 위한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왔다면, 김대중 정권 중·후반 들어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적극적인 양상으로 전화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한국 사회의 경우, 폭압적·전제적인 국가권력의 주도 하에 반공·발전주의 전략을 채택해 왔으며, 이것이 급격한 자본운동의 성장으로 이어져 왔다. 종속적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축적의 조건은 군사정권의 전일적 지휘 아래 국내 자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집중시키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자본 위기의 격화는 일국 차원의 국가 자율성, 민족주의적 발전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자본주의의 만성적 위기와 이로 인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축적은 종속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환위기를 항상적인 것으로 내재하게 만들게 된다. 한국사회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속적 자본주의로의 편입에 더욱 급격한 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이다. 착실하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단시간'에 위기를 극복한 아시아의 '신화'로 주목받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민중들의 삶의 전반적인 파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에 이르는 비정규직·불안정 노동 층의 확장, 그나마도 미미했던 공공적 영역의 축소와 폐쇄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더욱이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은 거의 해체되거나 종속적 발전을 가속화하는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자본운동 재편을 위한 사회전반 구조개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만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국가는 세계 자본주의 발전 방식을 더욱 열심히 모방하고,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편입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 모방과 편입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증명하고자 각종의 수사를 늘어놓고 있을 따름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화·개방화·민영화,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 구조조정 정책 등은 사실 명폐한 연관관계 속에서 움직여왔다.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목의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주주의 권리보호 및 최적화된 금융화의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질

되고 정치영역이 탈정치화되면서 중화학 공업화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리를 정돈해보자면 10월 유신은 계급적 불만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재생산 구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행해진 정치적 변화였고, 그 결과 야기된 국가의 정당성 결여를 회복하기 위한 '복지국가건설론'이 중화학공업화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정관용,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국가성격',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길사, 1988년

19) 물론 자본 축적의 세계적 위기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방향 이상의 선택을 불허한다는 객관적 조건 하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의미는 분명하다.

서로의 재편이었다. 소위 소유-경영의 선진화 역시도 결국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자본 스스로도 세계 시장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치루어야만 했을, '마름질'을 국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대신해주었다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어느 정도 국내의 자본 재편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 역시도 세계 시장에서의 생존가능성의 여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지배계급 내적 갈등 등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국내 재벌의 순위 변동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²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경우, 그 동안 자본축적을 주도해왔던 국가부문·공적부문을 국내의 자본에게 혈값에 매각하고, 이를 위해 노동 비용을 사전에 감축하는 방향 속에서 움직여 왔다. 그 동안 한국사회의 국가가 국가자본과 공적영역을 동원하여 호조건을 주도하고, 공공정책과 국가정책을 통해 자본축적의 순기능에 복무했다고 한다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국가의 이러한 역할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시장 재편 과정에서 한국사회 국가성격의 전화는 두드러진다. 그 동안 은행 중심의, 국가 주도형 자본시장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본 축적을 효율성을 보장해왔다면, 이제는 자본 중심 시장으로 재편해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금융조절 정책은 어느 정도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투기적 금융시장을 공고히 하는 제반의 여건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국가는 자본 축적의 호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최소한을 유지해오던 국가의 역할조차 포기하고, 자본운동의 전면적 재편, 시장화·개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그 동안은 국가정책을 통해 저곡가, 저렴한 공공요금 정책, 교육시스템을 장악함으로써 반공발전주의·위계적인 사회질서를 형성해 왔고, 이로써 한국사회 자본축적에 있어 가장 필요한 값싸고 순응적인 노동자를 '재생산'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력 재생산을 둘러싼 최소한의 기반을 포기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시장화·개방화를 위해 사회구조 전반의 재편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구상, 경제특구의 전국화를 위한 한국사회 재편 기획이 맞물리고 있다.

이미 95년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물류·금융 등에서 거점을 구축하자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 대두된 바 있다. 김대중 정권 또한 99년 12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개방형 국토거점을 제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02년 8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입법이 올라가면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 바야흐로 구체화되었으며, 2002년 11월 경제자유

20) 물론 자본시장, 시장에서의 경쟁만큼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리스크가 큰 것도 없을 것이다.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구조와 경영의 합리화를 그렇게 떠들어댔어도 현재 터지고 있는 비자금 문제 등만을 보더라도 과거와 그리 달라진 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본 운동 자체가 내재하는 경향이기도 하며, 정치권력과 자본이 유착하고 치졸하게 상생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구조 자체의 경향이기도 하다.

구역법으로 개칭하여 국회에 통과되면서, 2003년 7월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경제특구는 히트상품으로 통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경제특구를 신청하고 있고, 전 영토의 특구화를 위한 사회 전반의 재편, 법·제도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은 물류 중심지화, 비즈니스 거점화, 첨단기술산업의 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 등의 대략 세 방향으로 집약²¹⁾되고 있다. 물류 중심지화를 위해 인천공항, 신 부 산·광양항을 확충하여 이 지역을 동북아 허브 공항 및 항만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하여, 소위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실로 화려한 한 구상으로 포장되고 있다. 비즈니스 거점화는 각종의 기업서비스와 국제금융 서비스의 기본 토대를 갖추어 기업과 금융 비즈니스의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국내의 독점자본의 동북아 지역 본사와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물류 중심지화를 통해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을 중심 거점으로 하여 각종의 생활 환경, 경영, 교육·의료·문화, 노동·여성·환경 등 전반을 재편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첨단산업 시설이 집적된 클러스터의 조성계획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홍콩·싱가폴·중국 등의 경험으로 보아 그리 생소하지도 새롭지도 않다. 더욱이 이들 국가가 결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하청 국가로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을 아무리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유포한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명확하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자본축적의 위기적 국면에서, 종속국 차원의 발전주의가 가능할 리 만 무하며,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경쟁력을 갖추어 틈새 시장을 노려본다 할지라도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경쟁자가 부지기수라는 점을 상기해 보자. 특히 대내적 자율성과 발전가능성이 시장화·개방화의 이름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남미 국가의 파괴적인 현실이 당장 우리의 미래일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최근 WTO 5차 각료회의가 무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이 셰이프가드 조항을 고집하고, 미국과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자국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은 현 자본주의 체계가 무조건적인 시장화·개방화를 내걸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거짓된 망언일 뿐임을 증명해준다. 시장화·개방화·세계화를 주장하면서도 자국 시장에 대한 보호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세계화의 논리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변적이며, 힘의 논리·약육강식의 논리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처지이면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제 3세계 국가들이 반기를 올리고, 미국과 유럽 연합의 폭력성에 항거(?)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오히려 모범생답게 서비스 협상의 진척에 일견 나서서 손을 들어주고 있다. 더욱이 세계 시장이 바라고 있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인, 경제자유구역을 몰아대어 협상도 필요 없는 시장화·개방화의 물꼬를 스스로 트고

21) 자세한 것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2003년 4월 4일, 전국민중연대(준)·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경제자유구역폐기범대위 주최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하길 바란다.

있는 것이다.

WTO 서비스 협상²²⁾만을 보더라도 12개 조항이라는 것이 그야 말로 일국 민중의 삶을 위락 퍼락할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심지어 매년 조항에 등장하는 '기타' 조항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한 번 상상해 본다면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 경제자유구역²³⁾은 실질적 시장개방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로 사회 전반, 이에 따른 법·

22) 1. 사업 서비스 : 1) 전문직 서비스 - 법률, 회계, 세무, 건축, 엔지니어링, 통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 의료 및 치의료, 수의료, 조산 간호 등 기타, 2) 컴퓨터 관련 서비스 - 컴퓨터 설비자문, 소프트웨어시행,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베이스 기타, 3) 연구개발 서비스 - 자연사회 R&D, 인문과학 R&D, 종합 R&D, 4) 부동산 서비스 - 소유임대자산관련, 계약 배이스, 5) 임대서비스 - 선박관련, 항공기관련, 기타운송 수단관련, 기타 장비관련, 기타 6) 기타 - 광고, 시장조사·여론조사, 경영컨설팅, 경영관련컨설팅, 기술검사 및 분석, 농림업관련자문, 어업관련서비스, 광업관련서비스, 제조업관련서비스, 에너지유통관련컨설팅, 요원 배치및공급, 조사및보안, 과학기술관련컨설팅, 장비유지수선, 건물청소, 사진, 포장, 인쇄, 국제회의의 용역, 기타

2. 커뮤니케이션 : 1) 우편서비스, 2) 배달서비스, 3) 통신서비스 - 음성전화, 패킷교환데이터전송, 회선교환 데이터전송, 텔렉스, 전신, 팩시밀리, 사설전용회선,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정부및데이터베이스검색, 전자데이터교환, 고도 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변환, 온라인 정보처리, 기타, 4) 시청각 - 영화및미디어제작배급업, 영화상영, 라디오TV, 라디오TV전송, 음반제작업, 기타, 5) 기타

3. 건설 : 1)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 2) 민간엔지니어링 관련 전문건설업, 3) 일반토목설치 및 조립, 4) 마무리 공사, 5) 기타

4. 유통 : 1) 중개, 2) 도매, 3) 소매, 4) 프랜차이즈, 5) 기타

5. 교육 : 1) 초등교육, 2) 중등교육, 3) 고등교육, 4) 성인교육, 5) 기타교육서비스

6. 환경 : 1) 하수, 2) 폐기물 처리, 3) 방역 및 기타 유사 서비스, 4) 기타 서비스

7. 금융서비스 : 1) 보험및보험관리업 - 생명 및 상해 보험, 손해보험법, 재보험및재보험업, 손해사정및보험계리업, 2)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보험 제외) - 예금업, 대출업, 금융리스업, 지급및송금업, 신탁업, 증권 자기매매, 증권발행, 중계, 자산관리, 금융결제, 금융관련자문, 금융정보제공, 3) 기타

8. 보건 사회 : 1) 병원, 2) 기타의료업, 3) 사회복지, 4) 기타 서비스

9. 관광 : 1) 호텔, 2) 관광안내 서비스, 3) 관광 가이드, 4) 기타 서비스

10. 오락 문화 스포츠 : 1) 오락, 2) 뉴스, 3)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 4) 스포츠, 5) 기타 서비스

11. 운송서비스 : 1) 해운 - 외항여객수송, 외항화물수송, 승무원이포함된선박임대, 선박유지및수선, 견인및예선, 기타해운보조서비스, 2) 내륙수상 운송 - 내륙수상여객운송, 내륙수상화물운송, 승무원이포함된선박임대, 선박유지및수선, 견인및예선, 내륙수상운송보조서비스, 3) 항공운송 - 여객운송, 화물운송, 승무원이포함된항공기임대, 항공기유지및수선, 항공운송보조서비스, 4) 우주운송, 5) 철도 운송 - 여객운송, 화물운송, 견인 및예차, 열차유지및수선, 철도운송보조서비스, 6) 도로운송 - 여객운송, 화물운송, 승무원이포함된승차 임대, 승합차유지및수선, 도로운송보조서비스, 7) 파이프라인 운송 - 연료운송, 기타물품운송, 8) 운송보조 서비스 - 창고, 화물취급, 화물운송대리, 기타서비스, 8) 기타 운송 서비스

12. 기타 서비스

23)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지역'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경영 및 생활 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전반의 재편의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및 엄청난 노동관련 개악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지 않는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해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고수, 1년 이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조항 철폐, 휴일·월차 수당 의무화 해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 대처 등이 그것이다.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미국·싱가폴 협정에 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과 유통·서비스를 둘러싼 논의라는 점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WTO 서비스 협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으로 드러난 유통·서비스·IT로의 자본재편의 상과도 맞물려 있다 할 것이다. 이렇듯 WTO 서비스협상, 자유무역협상(FTA) 등이 개시되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한다면, 그 동안 쌓아온 투쟁의 성과는 일거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노동시장 관련하여 각종의 유연화 조치가 포괄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지난 몇 년여 동안 지켜온 사유화 저지 투쟁 전선 역시 에너지 및 운송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으로 인해 정책에 밀려 유야무야될 조건에 놓여 있다.

특히 2004년은 시장개방을 위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재편의 결절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정리하고, 매각 등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저항을 비켜가면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제도의 재편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화와 개방화를 촉진하고자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 내에 한일 FTA가 협상이 개시될 것이며, 역시 올해 내 한·칠레 협상 국회비준 통과가 예고되어 있다. 2004년 초에는 한·싱가폴 협상이 시작되고, 내년 안에 WTO 협상을 만료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노동자의 기본권리 박탈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법 제 17조 4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 업종에 관해 파견업무 허용·허용기간 확대(법 제 17조 제 5항) 단체 행동권 제한(법 제 19조)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법 제 17조 1항)
-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들 면제 : 환경관련 법률 34개(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장사등에 관한법률, 향만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소하천정비법,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법 제 11조)에 근거한 인허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규제 폐기 환경관련 부담금 면제(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립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 제 15조 2항)
- 조세 징수권의 사실상 포기 :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법 제 15조 1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2003년 4월 4일, 전국민중연대(준)·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경제자유구역폐기법대위 주최 토론회 자료집 5쪽 참조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서비스 협상이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위력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일국 내 모든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엄중한 정세를 맞아 시장화·개방화의 공세, WTO·자유무역협정·경제특구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 운동의 질서를 전화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시장화·개방화 저지, WTO·경제특구 폐기,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을 제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당면한 저지 투쟁·방어 투쟁을 시작으로 하여 노동자·민중의 삶의 권리를 위한 공세적 투쟁을 병행함으로써 침체된 전선의 물꼬를 튼우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바야흐로 2004년을 WTO·경제특구 폐기,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의 원년으로 이끌어내갈 수 있어야 한다.

5. 당면한 투쟁 과제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면한 WTO 서비스 협상·경제특구 등 시장화·개방화 공세를 저지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누누히 현재의 방어투쟁을 넘어서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투쟁이 공세적 투쟁의 출발점이자 토대일 수밖에 없으며, 방어투쟁과 함께 공세투쟁을 병행함으로써 투쟁의 저변을 확장할 수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현재 이미 경제특구가 시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법·제도 개편, 사회전반의 시스템 전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2004년 말 완료되어 2005년 1월 시행되는 서비스 협상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폭력적 재편은 경제특구 시행과 이를 둘러싼 현 정권의 착실한 '예습 투쟁'으로 인해 무리 없이 진척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화·개방화, 경제특구와 WTO 서비스 협상의 효과는 노동자·민중의 삶 전반을 철저히 피폐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묵과하리만큼 대중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WTO 반대 투쟁에 10만 전교조 노동자들이 나서고 있으며, 농민들의 FTA·한칠레 협상 저지 투쟁에서 보여지는 투지가 그러하다. 지금 당장은 정권과 자본의 화려한 이데올로기로 인해 시장화·개방화 경향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그 실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대중들이 나서지 않을 이유도 없다. 더욱이 사유화 저지 투쟁에 매진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 역시 WTO·경제특구의 시행으로 투쟁전선이 전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새로이 투쟁의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그 동안 지켜온 저지 투쟁 전선이 조만간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며, 적어도 그 동안의 투쟁보다 주체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자본의 공세를 투쟁의 호조건으로 전변시켜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시장화·개방화 저지 투쟁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가에 대해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다. 현재의 지형만을 보더라도 FTA·한칠레 협상 저지 투쟁은 농민이 하는 투쟁으로, 교육은 교육노동자들이, 의료는 의료관련자들이, 문화는 문화관련자들의 투쟁이

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시장화·개방화 저지 투쟁이 상당히 막막한 투쟁으로 여겨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이 투쟁은 부문별·단위별 투쟁을 넘어 서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기에 현재는 일정한 선도적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투쟁으로 나설 수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일단의 방어 전선을 강고하게 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체를 중심으로 다방면에서 주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그 다음이다. 판단해 보건데, 상반기는 부문별 주체를 중심으로 한 분산적 투쟁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나, 모든 투쟁은 그것의 발화점이 필요한 법이다.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 그리고 의료의 투쟁을 치밀하게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장화·개방화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구석구석을 파탄시키는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결국 WTO·경제특구 폐기 투쟁을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으로 이어나감으로써 방어적 투쟁을 공세적 투쟁으로, 추상적인 투쟁 요구를 구체적인 삶의 요구로, 분산적인 투쟁 전선을 대 국가 투쟁전선으로 전화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당위적 선언으로 가능하지 않다. 당면한 투쟁 주체들 간의 실질적 연대를 통해 당면한 저지 투쟁에 돌입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대중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나갈 수 있는 공세적 투쟁을 '기획'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의료·문화 등에서 WTO·경제특구 폐기 투쟁이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고 공고히 하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이미 제출되고 있는 구체적 이행의 방도를 중심으로 대중 투쟁을 기획해나가야만 한다.

WTO·경제특구관련 법·제도, 사회질서재편을 저지하는 투쟁에 주력하자!

교육의 경우 이미 2002년부터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을 위한 5대 법안 개정이 준비되고 있었으며, 이번 국회에서는 경제특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이 올라가 있다. WTO 서비스 협상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완전한 시장자유화, 초·중등 부문에 대한 개방 요구들이 대내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장개방의 필수 전제인 규제 완화가 매우 포괄적인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영리법인이 학교 설립 허용, 조기유학 제한 조치 해체, 외국인 초·중등 교원임용 허용과 전반적인 교육 노동시장의 유연화, 한국에 진출한 교육자본의 자국 이윤 송출 허용, 수도권 밀집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조정 혹은 해체,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입학 불허 조치 해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등이 그것이다. 그나마도 공교육의 비중이 열악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시장화 경향의 확대는 사교육비의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경쟁적이고 반인간적인 교육시장을 확대해나갈 수밖에 없다. 문화 역시 광고·사진·인쇄 및 출판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시청각 서비스인 영화·방송·음반 서비스와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중 엔터테인먼트·뉴스에이전시·도서관·박물관·스포츠서비스 개방이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2002년 6월

30일 제출한 양허 요청안에서 문화시장을 개방할 것을 여러 나라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2개국에 대하여 광고·출판·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음반·공연 등의 시장개방을 요구했고, 2003년 1월 13개국으로부터 사진·출판·영화상영·방송·엔터테인먼트·통신사 등에 대한 시장개방 및 제한사항 철폐를 요구받고 있다²⁴⁾. 의료의 경우 영리의료법인 합법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도 폐기, 공공병원 및 지방의료공단 사유화 등이 핵심적인 추진과제이다. 영리의료법인의 합법화와 공공병원 사유화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기한다면, 실제로 민간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출입구가 열리는 꼴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해 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러한 전면적인 시장화·개방화를 실질적으로 실행시키는 조치로서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보면, 지정 구역 내에 외국 자본이 초·중등 학교 및 대학교와 대학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원 임용은 물론 한국인 입학도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학교에 대해 지자체 혹은 국가가 학교의 건축과 운영, 부지 관련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 역시 마찬가지인데, 외국 자본이 의료기관과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며, 이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자유롭다. 이미 우리는 전면적인 시장화·개방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초국적 자본은 국내 시장 곳곳에 잠입하게 될 것이며, 특구에 대한 차별철폐와 형평성을 근거로 특구의 전국화를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국내 자본 역시 외국 자본과의 형평성을 들어 영리 의료·교육법인 설립에 뛰어들 것이며, 민간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전반적인 법·제도 개편은 나래를 펼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의료·문화를 중심으로 시장화·개방화 저지 투쟁의 공통분모를 시급히 구성하고, 공동투쟁의 결의를 확보해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의 투쟁을 먼 산 보듯 지켜볼 것이 아니라면, 노동운동 전반이 공동투쟁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4년 상반기 총선의 경우 더욱이 사회공공성 쟁취, WTO·경제특구 폐기를 대중적으로 사회화시켜낼 수 있는 계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료·문화를 중심으로 공동의 총선 정책단을 구성하여 공세적인 요구안을 가지고 투쟁해볼 만하다.

WTO·경제특구폐기를 위한 전략적 연대단위, 투쟁의 구심점을 구성하자!

급박한 투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교육·의료·문화 나아가 농민 투쟁에서조차 최소한의

24) 'DDA 문화시장 개방과 이에 맞선 대응', 양기환(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WTO 협상 저지를 위한 교육·문화·의료 분야 공동토론회, 2003년 2월 19일, WTO 교육개방저지공투분,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민중의료연합,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주최 자료집 참조

연대 단위가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현재 민중연대 내에 WTO 관련 전략회의가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책임 있는 논의단위로 서고 있지 못함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분산된 투쟁으로 인해 매번 패배의 쓴잔을 마시면서도 이러한 운동의 구조적 조건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남들과 연대하면 우리의 사안이 묻힌다는 자기 중심성', '공동투쟁을 결의하고도 우리가 손해볼 지 모른다는 자폐적인 의구심', '급할 때만 손 내밀고 남의 중병이 내 감기보다 못하다는 식의 실용주의 및 이기주의!' 이것이 우리 운동 내에 만연화되어 있는 관성²⁵⁾이다. 물론 대중 조직의 경우 이 '연대'의 문제를 풀기에 쉬운 조직이 아니다. 총파업을 하고 정치투쟁을 하자고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부문 동의하지만, 당장의 요구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대중운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을 교묘히 분산시키는 등의 파상공세를 통해 연대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술책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돌파할 만한 조직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악조건을 딛고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감과 무력감에서 탈출해야 한다.

교육의 경우 다행히도 2003년 10월 11일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이 전화하여 'WTO·교육개방저지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국민교육연대'를 결성하였고, 현재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나아가 입시제도 개선 및 대학 개혁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의 경우 상당히 복잡한데, '의료시장개방반대공대위'가 존재하고 있지만 '방지거병원공공병원화공대위', '간병인문제해결과서울대병원재자리찾기공대위', '동부시립병원민간위탁저지공대위', '청구성심병원부당노동행위공대위' 등 공대위의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의 경우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WTO에 대항하는 대안적 국제문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공공문화기반시설개혁 및 공공적 활용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농민 투쟁을 보면 농민 내적으로는 단일하고 책임 있는 투쟁 대오를 결성하고는 있지만, 연대운동의 측면에서 폐쇄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기에 시장화·개방화 저지, WTO·경제특구

25) 물론 이러한 관성에 대해 쉽게 비난하고 말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성은 지도부의 결의나 몇몇의 결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운동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2년 2월 25일 발전·철도·가스 3사의 연대파업을 기억한다. 비록 이 투쟁이 공동파업만을 성사시키고 공동의 마무리로 나아가지 못해 결정적인 한계를 보였으나, 목적 의식적으로 투쟁 일정을 맞추고 이에 따라 대중들을 설득해갔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이렇듯 투쟁의 시기와 일정을 공동으로 맞추고, 이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매번 총파업을 외치고 매번 총파업이 유야 무야되어 항상 실망하고 말지만, 실질적으로 총파업을 성사시키는 일은 그야말로 어렵고 지난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을 설득하는 내용과 과정이며, 이를 결단하는 지도력을 밑으로부터 구성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폐기를 위한 전략적인 지도 구심을 형성하고, 이로써 실질적인 지도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WTO 서비스 협상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투쟁의 그림을 그려보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각 사안별 협상과 이에 따른 대응이 분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특구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편 역시 사안별 일정의 편차, 시간의 편차를 두고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투쟁의 시점과 계기를 일치시켜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본과 정권의 '일정 공세'를 돌파할 수 있는 선점 투쟁, 기획 투쟁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의료·문화·농민을 중심 주체로 하여 시급히 투쟁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WTO·경제특구와 연관된 투쟁 단위들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교육의 경우 범국민교육연대와 함께 대학개방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학생운동 단위²⁶⁾가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학생의 경우, 교육 시장 개방이라는 문제와 함께 대학평준화, 대학교육 무상화의 요구는 대중적인 쟁점이다. 교육개혁·교육의 민중적 재편에 있어 대학교육 문제가 가장 질곡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사회화시켜나가고 대중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간다면, 교육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거점에 포진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시장화 경향에 역공을 펼 수 있다. 문화의 경우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주체가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문화가 매우 척박한 상황이며, 대중문화 역시 자본의 소비 문화, 이데올로기 담론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급운동으로서의 문화 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대중 투쟁의 공간을 무한

26) 한국사회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해온 정치적 선도성은 운동의 발전에 주요한 기틀이 었음은 부정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노동운동 차원에서 개량주의적 노선전화가 발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초반부터 학생운동 내적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발전되었다. 노동운동 자체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조건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정치적 선도성은 일정하게 소멸되는 과정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운동이 교육개혁과 자치운동을 중심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소위 부문운동으로서의 재편에 대한 주장 등이 일어난 바 있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파생적 효과이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그 계급적 위상이 불안정한 학생운동의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운동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학생, 적확히 표현해 대학생의 지위는 한 편에서는 노동자로서, 다른 한 편에서는 노동력 재생산의 위계화된 재생산의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학생운동이 가질 수 있는 선도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학생운동 내적, 그리고 전체 운동 차원의 노력은 중요하다. 특히 노동운동이 이를 방기하고 있음에 대해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 그야말로 품도 들이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것이 노동운동이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기 때문이다. 교육·문화·의료에서의 투쟁이 부문운동으로 치부되던 시절을 넘어 이제 더욱 치열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이 계급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계급투쟁에서의 몫 역시 매우 중요하다. 대학개혁을 사회적 의제, 사회공공성의 의제로 만들어나가고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를 해체하는 주체로서, 청년실업의 최대 피해자로서 학생 대중들의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히 확장시켜낼 수 있는 접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의료의 경우 보건의료노동조합, 의료 관련 제반의 사회운동, 사회보험노동조합 등으로 이미 조직된 주체들이 존재하기에 이를 중심으로 한 공감대 형성, 투쟁 목표의 공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물론 당면 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 전략적 연대단위를 구성하는 문제는 결합의 양과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익히 경험해 왔듯이 공동투쟁을 실질적으로 결의하고, 전술을 공유할 수 있는 책임성이 더더욱 중요하다. 자본과 정권의 파상공세에 그나마 형성되어 있는 대중적 힘이 밀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투쟁의 실질적인 결의가 필요하다. 공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공동의 투쟁이 각 단위의 쟁점을 희석시키거나 묻히게 한다는, 그 관성에서부터 우선 벗어나자. 공동투쟁의 전선을 쳤을 때만이 투쟁의 물리적 힘이 훨씬 증가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전략적 연대단위가 또 다른 연대의 욕망을 만드는 '헛짓'이 아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쟁의 목표치, 전술의 공유와 통일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투쟁의 중심이 형성될 수 있다면, 경제자유구역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대책위와 민중연대 지역조직이 연계를 높여 전국적 투쟁의 틀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교육과 의료의 경우 다행히도 전국사업장이라 지역 대책위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존재한다. 특히 교육의 경우 전국적 투쟁의 틀을 구축하는 일에 주요한 매개고리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여기에 농민 대오가 결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기업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그 동안 매각 저지를 중심으로 한 투쟁전선은 일정하게 생을 마감했으며, 전반적인 시장화 공세에서 공기업의 시장주의적 운영이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매각의 효과를 내는 다양한 구조조정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노동에 대한 공격은 이에 따라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공기업 노동자들은 당면한 WTO·경제특구 저지 투쟁에 결합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공기업의 공공적 운영, 공기업의 민중적 전화에 대한 대안적 상을 제기함으로써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의 중요한 진지를 사수해나가는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WTO서비스협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국민적 논의없는 밀실 협상 즉각 중단! 노동자·민중운동진영차원의 서비스협상공동대응을 위한 "민중대표단" 구성!

공동의 투쟁전선을 설치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하는 일이며, 나아가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대 국가 투쟁 전선이 강고하게 형성될 수 있다. WTO 서비스 협상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각국이 양허안을 내고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을 죄어 올 것들에 대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외교통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사안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방대하게 얽히고 설키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나아가 민중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 밀실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민중적 요구와 불만이 전달될 수 있는 어떠한 통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 내용의 공개, 국민적 논의 없는 협상 즉각 중단,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공동대표단 구성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자. 이러한 요구는 현재의 시장화·개방화 공세의 문제점에 대해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상징적인 투쟁의 매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상반기는 해당 주체들이 방어투쟁에 주력하는데 매진하면서도 나아가 실질적 연대 투쟁의 기반을 형성해나가는 시기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WTO·경제특구 폐기 투쟁의 쟁점을 부각시켜, 이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시기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인 대중투쟁, 물리적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2005년 1월 WTO 서비스 협상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낼 수 있는 국제적 연대 역시 주요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서비스 및 농업 협상 관련 국제 노동자·민중연대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도록 하자.

공세적인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을 통해 WTO·경제특구의 실질적 폐기를 도모하자!

공공영역, 공공성을 확장·강화해나가는 투쟁은 시장화·개방화의 경향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이 투쟁이 성공할 수 있다면 아니 투쟁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시장화 경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주요한 물꼬가 트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공공성을 둘러싼 계급투쟁, 사회적 투쟁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회공공성에 대한 수동적 인식과 패배적 정서가 강하다. 더욱이 현재의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은 국가를 직접적 대상으로 한 투쟁의 부담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서야 다가서는, '열려진' 공간으로서의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은 그런 만큼 기획해봄직한 것들이 풍성하다. 공동 육아와 영유아 무상교육 쟁취 투쟁을 지역적 수준에서 전개하고, 이러한 투쟁을 해당 지역 노동조합에서 지역 임단투의 내용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WTO·경제특구를 위한 반민중적 개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상의료와 교육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법제화 투쟁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에너지 산업과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 시장화·개방화가 환경규제를 완화·폐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정책을 둘러싼 투쟁 역시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왜곡된 교육구조가 노동시장의 분단화와 불안정화를 부추기고, 청년실업의 만성화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요구는 급박한 투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투쟁이 그 자체로 머물렀을 때까지는 한계를 앞서 지적한 바 있으나, 그 한계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자발성에 근거한 투쟁 공간이 열린다는 점, 그 공간은 대중주체 형성의 인큐베이터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정세분석과 투쟁 계획 수립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활동가 수련회' (가칭)를 제안합니다.

발신: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수신: 국민행동 소속 단체, 대안세계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

■ 문제의식

▶ 우리는 1997년 경제 위기 직후 IMF의 구조조정에 이어 이제는 '신자유주의적 무역질서'를 통한 총체적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의 신자유주의 질서 편입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금융, 노동, 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민중의 삶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현재 수많은 노동자들이 버랑끝에,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리고 있으며, 공공부문 사유화는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후퇴시킴으로써 전사회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 한편, IMF를 통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WTO의 확대·강화, 각종 양자간 투자 및 무역협정 체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국내에서의 시장화/자유화 정책을 통한 공격 또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1998년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불가피론', '개방화=국익' 등의 이데올로기가 유포되면서 일본, 미국, 칠레 등과의 자유무역/투자협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발미로 한 노동권과 사회공공성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최근 WTO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양자간/지역 협정을 통해 보다 집중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WTO 5차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다자간 체계를 통한 무역 협상은 비밀리 계속 진행되는 동시에, 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내 자유화 조치를 확대하는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양자간 협정 뿐 아니라 아시아의 지역적 경제통합에 대한 자본 측의 구상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 정부들은 양자간 협정과 지역 협정 체결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보다 공고히 하자는 약속을 서로 하였으며, ASEAN, ASEAN+3 등을 강화하여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APEC와 ASEM 등을 통해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다자간/양자간/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우리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매우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 WTO, FTA, 경제자유구역 등은 더 이상 '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다. 다자간/양자간/지역 '무역' 협정은 교육, 의료, 문화, 심지어 생태계 그 자체를 아우르는 서비스 자유화, 기간산업 사유화, 의약품 접근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개방을 촉진하여 식량주권·식량안전을 위협하고, 노동권을 집중적으로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 또한, 한칠레FTA가 국회비준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노동탄압을 노골화하는 한일FTA 협상이 연내 시작된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 및 의료를 개방하기 위한 각종 법률 또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올해 투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현재 압박해있는 사안에 대한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내년에 보다 가속화될 시장화/자유화 정책에 대한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투쟁을 평가하고, 입체적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투쟁을 진행하자.

○ 교육양허안 저지 투쟁, 농업개방 저지 투쟁, 사유화 저지 투쟁, 비정규직 투쟁, '한국민중간군 투쟁단'을 비롯한 반WTO 투쟁 등 반신자유주의/대안세계화 운동의 질적 발전과 확대를 우리는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투쟁이 여전히 '사안별' 또는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구조조정 반대', '반세계화=개방 반대' 식의 구도와 분리가 운동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 입체적인 투쟁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강력해질 국내에서의 자유화 조치, 다자간 체제의 위기와 함께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양자간 FTA와 지역FTA에 대해 각계각파하는 투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 한편, 급부상하고 있는 군사주의에 대항하는 반전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 간 결합은 여전히 분석적 또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두 투쟁을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적으로 운동을 결합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 또한, 지난 몇 년 간의 경험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반신자유주의/대안세계화 투쟁에 있어 국제연대는 필수적이다. 아시아지역 내 사회운동 및 지구적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해외운동과 한국 운동이 상호 호흡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해나가기 위한 계획과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 목표 및 핵심 토론 주제

○ 2004년도 정세 분석을 통한 반신자유주의/대안세계화 운동의 전체적 방향 수립

○ WTO, APEC, FTA,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무역질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

○ WTO, APEC, FTA, 경제자유구역 등 신자유주의의 시장화/자유화 정책에 대한 입체적 대응 방안과 공동투쟁의 가능성 모색

- 사안별 또는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투쟁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속적 위협과 한국의 공조와 한반도 전쟁 위협이 신자유주의 질서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기반으로 반전 투쟁과 대안세계화 투쟁 간 연계 방안 모색
- 지구적 사회운동의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는 가운데, 국제연대의 방향을 수립하고 한국 민중·사회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연대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모색

■ 참가 대상

- 국민행동 집행위원 및 소속 단체 활동가
 - 교육, 의료, 문화, 농업 등 각 부문별 연대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 및 활동가
 - 공공부문 사유화, WTO 및 FTA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활동가
 - 반전투쟁과 대안세계화 활동의 연계를 고민하고 있는 단체 및 활동가
 - 그 외 민중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고민하고 있는 단체, 학생 및 개인
- * 총 50-100여명 규모

■ 일시 및 장소

- 2003년 12월 19일(금) - 20일(토); 1박 2일
- 장소: 미정

■ 수련회 프로그램 (가안)

- * 공동기획단에서 수정,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 확정

19일	20일
10:00 - 12:00 집결 및 이동	09:00 - 10:00 부문/사안별 마당 결과 공유
12:00 - 13:00 점심 식사, 짐정리, 방배치 등	10:00 - 12:00 III. 대응방안 (전체발제) - 2004년 투쟁 과제, 계획 및 방향 수립
13:00 - 15:00 I. 총론 (전체발제) - 2004년 정세분석/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현황	12:00 - 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5:00 - 16:30 I. 총론 (그룹토론)	13:00 - 14:30 III. 대응방안 (그룹토론)
16:30 - 17:30 I. 총론 (전체 총화)	14:30 - 15:30 III. 대응방안 (전체 총화)
17:30 - 19:00 참가자 연대를 위한 놀이마당	15:30 - 16:30 폐회식 및 평가
19:00 - 20:00 저녁 식사 및 휴식	17:00 - 19:00 이동
20:00 - 23:00 II. 부문/사안별 마당 - 교육, 의료, 문화, 농업, 기간산업, 노동 등	

■ 수련회 준비 절차

- 국민행동 및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연대체의 담당자 간 '수련회 공동기획단' 구성
-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 및 일정 수립하여 각 참가 단체/연대체에서 공유 및 조직화
- 공동기획단이 전체 일정 조율 및 실무 담당
- ★ 공동기획단 첫 회의(가안): 11월 26일(수) 오후2:00